

#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정보통신 인증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 11. 30.

연구책임자 : 박 용 서 (경원 대학교)



연 구 원 : (소 속 기 관)

: (소 속 기 관)

연구보조원 : 김 세 준 (경원 대학교)



: 나 범 석 (경원 대학교)

## 요 약 문

1. 과제명 : 정보통신 인증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
2. 연구기간 : 2006. 4. 20 ~ 2006. 11. 30.
3. 연구책임자 : 박 용 서
4. 계획 대 진도

가. 월별 추진내용                      계획 .....      수행 ——

세부내용	연구자	월 별 추 진 계 획												비 고
		2	3	4	5	6	7	8	9	10	11	12		
<b>가. 전기통신기본법과 전파법의 인증 및 사후관리 규정 분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통신기본법의 인증 및 사후관리 규정 조사</li> <li>○ 전파법의 인증 및 사후관리 규정 조사</li> <li>○ 두 법령간의 중요 사항 비교표 작성</li> <li>○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의 인증법령 개정안 마련</li> </ul>	공통			.....	.....	.....	.....							
<b>나. 외국의 관련법령 조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 FNA의 인증 및 사후관리 제도 조사</li> <li>○ 중간보고서</li> <li>○ 일본 VCCI의 인증 및 사후관리 및 SDoC 제도 조사</li> <li>○ 호주, 미국, 캐나다의 인증 및 사후관리제도 조사</li> <li>○ 유럽연합의 CE 마킹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 조사</li> </ul>	공통					.....	.....		.....	.....	.....			

세부내용	연구자	월 별 추 진 계 획												비 고
		2	3	4	5	6	7	8	9	10	11	12		
<b>다. 인증 및 사후관리 관련 법령 위반 시 처벌기준 마련</b>  ○ 사후관리 시료의 확보 방안 및 시료의 시험을 위한 외부위탁 방안 연구 ○ 외국의 사례에 근거한 인증기기의 불합격 판정기준 조사 ○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개정안 작성 ○ DoC제도 도입 및 민간인증기관 설립에 대비하여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 업무의 발전방안 연구 ○ <b>최종보고서</b>	공통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div><div></div></div>		
분기별 수행진도(%)				30	50	80	100							

#### 나. 세부 과제별 추진사항

##### 1) 전기통신기본법과 전파법의 인증관련 사후관리 규정분석

- Web site 및 문헌 조사를 통하여 관련 최신 동향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음.
- 국내 해당분야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하여 관련 자료 확보 및 동향을 파악하고 있음
-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파법의 인증 및 사후관리규정 조사 및 분석
- 기본법과 전파법의 비교표 작성
- 인증관련 법령 개정안 작성
- 외국의 인증제도 조사
- 국내의 인증규격 조사
- 유럽, 미국, 독일의 인증규격 조사

- 2) 외국과 국내의 사후관리 제도 및 절차 비교
  - 국내의 사후관리 제도 조사
  - EU의 사후관리 제도를 파악하고 있음
  - 독일의 사후관리 규제기관(FNA)
- 3) 독일의 규제기관(FNA)의 임무 및 역할
  - 독일의 사후관리 조사
  - 국내의 정보통신 인증관련 법규위반에 따른 양형과의 비교.
- 5) 인증 및 사후관리 관련 법령 위반 시 처벌기준
  - 전기통신기본법과 전파법의 인증관련 법령을 조사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항을 개정
  - 양형 기준의 합리화와 세분화를 위한 외국 양형기준 조사
  -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업무지침 마련
  - 향 후 DoC 도입에 대비한 사후관리 절차 연구
  - 외국의 사후관리 시료의 확보 방안 및 시료의 시험을 위한 외부위탁 방안 연구
  - 외국의 사례에 근거한 인증기기의 불합격 판정기준 조사
  -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개정안 작성
  - DoC제도 도입 및 민간인증기관 설립에 대비하여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 업무의 발전방안 연구

## 5. 연구결과

본 연구는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파법으로 이원화된 인증관련 법령을 통합한 단일 법령 제정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인증관련 과태료, 벌칙 등의 양형기준을 재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의 인증제도를 외국의 인증제도 및 사후관리 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국내의 인증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국내 정보통신기기의 인증 및 지정시험기관에 관련된 각종 규정과 사후관리 제도의 분석 등을 바탕으로 국내의 인증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제 1 절 전파법과 전기통신기본법의 인증관련 법규

### 가. 인증 및 사후관리 관련 전기통신기본법과 전파법 조항의 개정

표 1 인증 및 사후관리 관련 전기통신기본법과 전파법 조항

전기통신 기본법	전파법	비고
제33조(형식승인)	제46조(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제57조(전자파적합등록)	
제33조의2(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46조의2(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등)	전파법46조4,5항의 독립
제33조의3(형식승인의 국가간 상호인정)	제46조의4(형식등록 및 형식검정과 전자파적합등록의 국가간 상호인정)	전파법79조1항(다른법률의 준용)을 대체
제34조의2(형식승인의 해지)	제46조의3(형식등록 및 형식검정의 해지)	전파법에 신설
제35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74조(형식검정 및 형식등록의 취소 등)	
	제75조(전자파적합등록의 취소)	
제45조의2(청문)	제77조(청문)	
제36조(사후관리)	제53조(조사 및 조치)	
제49조(벌칙)	제86조(벌칙)	
	제87조(벌칙)	
제53조(과태료)	제92조(과태료)	

표1은 인증관련 전기통신기본법과 전파법 조항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 전파법의 제69조(수수료)의 조항이 전기통신기본법에 신설이 요구됨
- 전파법 제46조제4항, 제5항의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2(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등)와 같이 독립시켜 조항을 신설
- 국가 간 상호인정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3(형식승인의 국가 간 상호인정)에 있으나 전파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설이 요구됨
- 전기통신기본법 제34조의2(형식승인의 해지)에 해당하는 조항을 전파법에 신설

#### 나. 전파법과 전기통신기본법의 인증관련 법규 비교

표2는 전파법과 전기통신기본법의 인증과 관련된 법령을 처분기준을 포함하여 유사한 위반 내용끼리 비교한 표이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두 법령의 위반내용이 서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두 법령의 처분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으며, 어떤 위반내용은 한 법령에만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기기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시험을 거부, 방해한 경우는 기본법은 과태료 처분대상이지만 전파법의 경우는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되어, 같은 위반내용에 대하여 양 법 간에 처벌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표 2 전파법과 전기통신기본법의 인증관련 법규 비교

위반내용	근거조항	처분기준	비고
형식검정,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지 않은 기기를 제작, 수입한 경우	전파법 제84조 제2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형평성 을 위하여 형량을 일치 시킬 필요가 있음
형식승인을 얻지 않은 기기를 제조, 판매, 수입한 경우	기본법 제48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형평성 을 위하여 형량을 일치 시킬 필요가 있음
형식검정,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 기기에 대한 사후관리조사·시험을 거부, 방해한 경우	전파법 제86조 제1호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형평성 을 위하여 형량을 일치 시킬 필요가 있음
조사·시험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	기본법 제53조 제1항 제8호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형식검정,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지 않은 기기의 판매,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 운송, 보관	전파법 제86조 제2호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형평성 을 위하여 형량을 일치 시킬 필요가 있음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전기통신기자재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기본법 제49조 제6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형식검정,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관련 불법 유통기기에 대한 시정, 철거, 파기, 수거, 사용중지 명령 위반	전파법 제86조 제4호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형평성 을 위하여 형량을 일치 시킬 필요가 있음
기술기준 부적합 전기통신기자재에 대한 생산 중지 명령 위반	전파법 제49조 제7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표 2 (계속)

위반내용	근거조항	처분기준	비고
형식검정, 형식등록, 전자과적합등록 기기에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진열·보관 또는 운송 하거나 무선국에 이를 설치한 경우	전과법 제90조 제3의2호	300만 원 이 하 과태료	형평성 을 위하여 형량을 일치 시킬 필요가 있음
형식승인 기기의 표시를 부착하지 않 고 전기통신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 매할 목적으로 진열	기본법 제53조 제1항 제6호	1천 만 원 이 하 과태료	
형식검정, 형식등록, 전자과적합등록 기기의 성능을 개조, 변조, 복제한 경 우	전과법 제84조 제3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 하 벌금	기본법 에 유사 조항 신설 필요
-	-	-	
형식검정, 형식등록, 전자과적합등록 기기의 변경 신고 규정을 위반	전과법 제92조 제3호	100만 원 이 하 과태료	기본법 에 유사 조항 신설 필요
-	-	-	
			전과법 에 유사 조항 신설 필요
불량품으로 판정된 전기통신기자재를 생산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 또는 판 매할 목적으로 진열	기본법 제53조 제1항 제7호	1천 만 원 이 하 과태료	

## 다. 인증제도 개편을 위한 전파관계 법령 개정안

표3은 전파법의 인증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으며, 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전파법 제46조제1항에서의 인증을 받는 자의 범위에 판매자를 추가하고 제3항을 행위자의 의무를 강조하도록 문항을 수정
- ② 제6항의 인증사항 변경에 있어서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③ 제46조제4항과 제5항의 내용이 성능시험기간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을 제46조의 2(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등) 조항으로 독립시킴.
- ④ 인증의 해지에 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34조의 2항을 참고하여 전파법에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의 해지 규정을 제46조의3 제1항과 제2항에 신설
- ⑤ 전파법 제79조제1항(다른 법률의 준용)을 전파법 제46조의 4에 국가간 상호인정 조항으로 대체하여 전기통신기본법령과 균형을 유지
- ⑥ 전파법 제53조(조사 및 조치) 규정에서는 위반이 있을 경우에만 조사하는 것을 필요한 경우에 조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사후관리의 유연성을 높임.
- ⑦ 제74조(형식검정 및 형식등록의 취소 등) 규정의 위반내용을 각호로 분리하여 인증규칙에서 행정처분을 달리 적용
- ⑧ 제84조제3호의 규정에서 기기의 성능을 개조·변조·복제한 것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게까지 벌칙을 부과하도록 개정
- ⑨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얻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제84조 제5호에

신설

- ⑩ 전기통신기본법제53조제1항7호를 참고하여 불량기기를 생산·수입·판매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제6호에 신설하였다.

표 3 전파법의 인증관련 법령 개정안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비고
제46조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등) ①무선설비의 기기 정보통신부장관이 다 행하는 형식검정을 수출용 무선설비의 기기 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무선설비 기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등) ①무선설비의 기기 정보통신부장관이 다 행하는 형식검정을 수출용 무선설비 기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본법령과 일치시킴 판매하는자 판매하는자 추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대상 기기는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형식검정 판매하거나 무선국에 이를 운송하거나 판매하는 기기는 그러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대상 기기는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판매를 이룰 목적으로 제작한 기기는 그러하다. 무선국에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기기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형식검정 합격 표시 또는 형식등록표시를 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장로 의무를 조하 수정	기본법 제33조 3항,4항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기기를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기기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기기의 경우에는 동항을 준용한다.	⑥제1항 및 제57조1항의 규정 의하여 무선설비 기기의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자 또는 전자파 환경안전에 관한 사항의 인종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7조의2의 기술훈과 판권이 있는 경우에는 동항을 준용한다.	인증사항의 변경내용을 구체화	



표 3 (계속)

제53조 (조사 및 조치)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제25조·제26조·제29조·제45조·제46조·제52조·제57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 (조사 및 조치)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에 관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생산·수입 또는 유통 중인 시설비의 기기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필요한 경우	기본법 제36조
제74조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의 취소 등) 3. 형식검정 합격표시 또는 형식등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때	제74조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의 취소 등) 3. 형식검정 합격표시 또는 형식등록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	3. 형식검정 합격표시 또는 형식등록표시를 허위로 한 때	3. 형식검정 합격표시 또는 형식등록표시를 허위로 한 때	
제84조 3.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기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기기의 성능을 개조·변조·복제한 자	제84조 3.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기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기기의 성능을 개조·변조·복제한 자	제84조 3.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기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기기의 성능을 개조·변조·복제하는 자	제84조 3.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기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기기의 성능을 개조·변조·복제하는 자	
		5.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얻은 자	5.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얻은 자	
		6. 제53조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받고 검사 결과 불량으로 판정된 기기를 생산 수입 판매 진열한 자	6. 제53조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받고 검사 결과 불량으로 판정된 기기를 생산 수입 판매 진열한 자	기본법 제53조1항 7호

## 라. 행정처분 기준 개정안

표4는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제13조1항을 위반했을 때 행정처분기준의 개정안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 제품을 유통시키는 것은 부적합기기를 유통시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인증취소 및 파기·수거명령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되도록 개정한다.
- ②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으로만 행정처분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생산·수입 중지 및 수거·시정명령의 행정처분으로 개정한다.
- ③ 위반 내용이 정보통신기기에 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의 인증취소 및 수거명령의 행정처분은 부적합기기를 유통한 것이 아니므로 2차 위반 시 수거명령으로 개정한다.
- ④ 정보통신기기에 인증표시를 허위로 한 기기란 불법기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표시 규칙 위반 기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반 내용을 “정보통신기기에 인증표시 규칙을 위반한 때”로 개정하고 2차 위반 시 인증취소 및 수거명령으로 개정한다.
- ⑤ 정보통신기기의 기술기준 변경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의 1차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으로 2차 위반 시에는 인증취소의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한다.

표 4 정보통신기기 인증취소 등의 처분기준 개정안

개정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현행	1. 허위 기타 부정확한 방법으로 인증을 얻은 때	○ 전기통신기본법 제35조제1항 제1호 ○ 전파법 제74조제1항 제1호 및 제75조	인증취소	
개정	유지	유지	인증취소 및 파기·수거명령	
현행	2. 정보통신기기가 당해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전기통신기본법 제35조제1항 제2호 ○ 전파법 제74조제1항 제2호 및 제75조	시정명령 또는 생산·수입 중지 및 수거명령	인증취소 및 파기·수거명령
개정	유지	유지	생산·수입 중지 및 수거·시정명령	해당없음



표 4 (계속)

현행	3. 정보통신기기에 인증 표시를 하지 아니 한 때	인	○ 전기통신기본법 제35조제1항 제3호 ○ 전파법 제74조제1항 제3호 및 제75조	시정명령	인증취소 및 수거명령
개정		유지	유지	유지	수거명령
현행	4. 정보통신기기에 인 증 표시를 허위로 한 때	인	○ 전기통신기본법 제35조제1항 제3호 ○ 전파법 제74조제1항 제3호 및 제75조	시정명령	인증취소
개정	4.정보통신기기에 인증 표시의 규칙을 위반 한 때	인증	유지	유지	인증취소 및 수거명령
현행	-	-	-	-	-
개정	5. 정보통신기기에 대 한 기술기준 변경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대	○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 제5항 ○ 전파법 제74조제1항 제4호 및 제75조	시정명령	인증취소

## 제 2 절 사후관리의 개선 방안

### 2.1 사후관리 업무 지침 제정

전기통신기본법 제36조, 전파법 제53조,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제10조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처리절차 등을 정하는 지침을 제정한다. 이 지침에 포함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간사후관리계획의 수립
  - 전년도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 원인 등의 분석결과에 따른 중점 추진방향 수립
  - 분야별 사후관리 목표 설정 및 시료확보의 방법, 절차 등 세부 추진계획
  - 중점관리대상기기의 선정
  - 기타 사후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 수시관리 실시 대상기기 선정기준을 정한다.
  - 민원이 제기된 경우
  - 중앙전파관리소·체신청 등 유관기관에서 요청한 경우
  - 전기통신망 또는 전파통신 이용질서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무단변경, 개조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기술기준 부적합 기기의 생산·수입·판매를 인지한 경우
- 중점관리대상기기 선정기준을 정한다.
  - 민원이 발생한 기기
  - 지정시험기관의 성능시험, 유관기관 검사 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기
  -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기기
  - 기술기준 제·개정으로 인하여 인증대상기기로 추가된 기기

- 전기통신망 또는 전파이용 질서에 위해를 발생한 기기
- 변경신고의 이행여부가 의심되거나 변경이 빈번한 기기
- 사후관리 조사·확인사항은 인증여부, 인증표시의 적정성, 변경 신고 등의 이행여부에 한하도록 한다. 인증 받은 자로부터 정보통신기기를 제출받아 시험 또는 확인 할 수 있는 범위와 확보방법을 정한다.
  - 시정명령 등에 따른 조치가 완료된 경우로서 당해 기기에 대한 시험 또는 확인이 필요한 정보통신기기
  -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정보통신기기
  -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시험 후 처분하여 활용하기 어려운 정보통신기기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시험을 요청하는 정보통신기기
  - 특수 제작되어 특정업체에 공급되거나 특정서비스를 가입하는 조건으로 판매되어 구매하기 어려운 정보통신기기
  - 유통 중인 기기는 현지에서 선정한 후 인증을 받은 자의 동의를 얻어 직접 반입
  - 유통 대기 중인 기기는 인증을 받은 자의 동의를 얻어 보관 장소에서 선정하여 반입
- 부적합판정기준 및 성능시험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 조사·확인결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당해 기술기준에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 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 규칙 제8조 및 운영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인증표시 사항이 허위 또는 누락된 경우
- 사후관리 조사·확인결과와 통보 및 조치사항을 명시하고 당사

자가 원할 경우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소장은 조사·확인·성능시험 등의 결과 및 위규 사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내용을 인증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정명령 등을 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 조치기간 및 결과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소장은 당해 기술기준에 부적합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2대 이하의 기기를 추가로 구입하거나 당사자로부터 제출받아 재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재시험 결과 부적합인 경우 당해 기기가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본다.
- 기술기준 부적합기기로 판명되어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이를 사전에 통지해야 하며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의견청취, 청문 등을 실시한다.
  - 제출기한 내에 당사자가 전화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경우 서식에 의한 구술 의견 기록서를 작성해야 한다.
  - 소장은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을 신의·성실로 청취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할 경우 행정처분 확정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소장은 지정취소 및 인증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토록 하고 조치결과에 대한 이행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소장은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부적합기기 조치결과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를 위하여 사용된 시료의 처리 방법
  - 사후관리 시료로 무상으로 반입된 기기는 사후관리 완료 후 즉시 반납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구매한 기기는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 및 관리전환·양여·매

각·폐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2.2 효율적인 사후관리 실시 방안

사후관리 시료의 확보 및 시험 비율의 증대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사후관리 시료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고, 확보된 시료가 적기에 시험되어서 불량품 관리 등의 신속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시험은 외부 기관(예, 현재의 지정시험기관)에 유료로 위탁하도록 한다.
  - － 이를 위한 법제도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 사후관리 시험 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전파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결정한다.
- 현재의 시료확보율의 증대 방안
  - － 자기적합성선언을 한 기기의 제조자/수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시료 및 관련 서류의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한다.
- 해당 시료 및 관련 서류의 보관기간을 정한다.
- 행정 처분 기준의 세분화 및 구체화한다.

## 2.3 자기적합선언에 대비한 사후관리 방안

향후 자기적합성선언에 대한 사후관리로의 전환이 예상됨에 따라서 관리의 목적과 대상 기기의 수 자체가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실정 및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 사후관리를 위한 시료확보의 확대
  - － 사후관리 시료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대
  - － 시료의 시험을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수거율이 증대
  - － 일반인에 의한 신고(민원) 제도의 운용

- 사후관리 조직 및 인력의 확충
  - 기존 조직의 확대,
  - 소비자 보호 관련 단체/기관의 개입
- 지정시험기관의 역할 확대
  - 현행과 같이 신청인이 접수하는 기기를 검사, 확인
  - 유통 단계에 있는 물품에 대한 사후 관리차원에서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
- 제조자의 자기적합성선언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축소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분을 지정시험기관이 보완
  - 적합성평가 시에 지정시험기관의 과실이 있으면, 정부가 아닌 지정시험기관이 책임을 부담

## 6. 기대 효과

### 가. 연구결과 도출내용

- 국내 및 외국의 인증제도의 분석을 통한 국내 인증제도 개선 방안 도출
- 국내 및 외국의 사후관리 실태 분석을 통한 국내 사후관리 제도 개선 방안 도출
- DoC 제도 도입 및 민간인증기관 설립에 대비한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 업무의 발전 방안 도출

### 나. 연구성과 활용

- 국제 기준에 맞는 인증제도를 만드는데 활용
- 사후관리의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공조체계와 역할 분담을 통해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관련 규정을 마련

### 다. 기대효과

- 사후관리 관련 규정의 개선을 통하여 일관된 사후관리 업무처리와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합리적인 사후관리 제도 운영을 통하여 국내 유통시장 질서를 바르게 확립함으로써 국내 시장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에서 정보통신기기를 제조하는 업체가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의 수출에서 우위를 확보하는데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DoC 제도 도입 및 민간인증기관 설립에 대비한 사후관리 업무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7. 기자재 사용 내역

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보유 현황	확보 방안	비 고
개인용 컴퓨터	Pentium IV	4	자료 검색 및 정리	보유		
노트북 컴퓨터	Fujitsu	3	자료 검색 및 정리	보유		
프린터	HP-LJ6P	2	인쇄	보유		
프린터	HP-2420d	1	인쇄	보유		

## 8. 기타사항

○ 인증 및 사후관리 제도와 관련된 활동으로 전파연구소의 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연구반에 참여하고 있음.



## SUMMARY

### I. Certification clauses Basic Telecommunication Act and Radio Act

#### A. Revisions of FAT and RWA for certification and market surveillance

Table 1 Provisions of FAT and RWA regarding Certification and  
Market Surveillance

FAT	RWA	Remarks
Article 33 (Approval for Types)	Article 46 (Type Examination, Type Registration and others)	
	Article 57 (Registration of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Article 33-2(Designation, etc. of Performance Testing Institution)	<b>Article 46-2(Designation, etc. of Performance Testing Institution)</b>	Separation of Art. 46 Pra 4,5
Article 33-3(Mutual Recognition of Type Approval between States)	<b>Article 46-4(Mutual Recognition of Type Registration and Type Examination between States)</b>	Substitution for Art. 79 Pra. 1 in RWA
Article 34-2(Termination of Type Approval)	<b>Article 46-3(Termination of Type Registration and Type Examination and EMC Registration)</b>	Establishment in RWA
Article 35(Cancellation, etc. of Type Approval)	Article 74(Cancellation of Formal Examination and Formal Registration)	
	Article 75(Cancellation of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Registration)	
Article 45-2(Hearing)	Article 77(Hearing)	

Article 36(Market Surveillance)	Article 53(Investigation and Action)	
Article 49(Penalty)	Article 86(Penalty)	
	Article 87(Penalty)	
Article 53(Fine for Negligence)	Article 92 (Fine for Negligence)	

The revisions of provisions regarding certification and market Surveillance in FAT(Framework Act on Telecommunications) and RWA(Radio Wave Act) are as follows.

- The new establishment of article of Fee in FNA.
- Separation of Article 46 Section 4 and Section 5 from Article 46 of RWA to establish article of Designation, etc. of Performance Testing Institution
- The article of Mutual Recognition of Type registration and Type examination between States is established in RA.
- The new establishment of article of cancellation of type registration/type examination in RWA

## **B. Comparison between Articles of Penalty of FAT and RWA**

Some penalties compliance with provisions of FAT and RWA are different in case of similar violations. In this point of view, provisions regarding this discrepancy should be revised. Table 2 shows these discrepancies.

Table 2 Comparison of penalty provisions of FAT and RWA

Violation	Act	Criminal offence
A person who manufactured or imported for the purpose of sale any apparatus that did not pass type examination or complete type registration and did not make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registration	RWA Art. 84 No. 2	imprisonment not exceeding 3 years or be fined up to 20 million won
A person who has produced, sold, or imported the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without obtaining type approval	FAT Art. 48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3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million won
A person who refused or interfered with inspection, investigation or test	RWA Art. 86 No. 1	imprisonment not exceeding 1 year or be fined not exceeding 5 million won
A person who has refused, obstructed or evaded the inspection and testing	FAT Art. 53 Pra. 1 No. 8	a fine for negligenc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A person who sold, displayed, transported or stored for the purpose of sale any apparatus that did not pass type examination or complete type registration and did not complete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registration	RWA Art. 86 No. 2	imprisonment not exceeding 1 year or be fined not exceeding 5 million won
A person who has displayed the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with intention of sale without obtaining type approval	FAT Art. 49 No. 6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1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A person who did not implement the order or operated radio/radio equipment that the suspension of operation was ordered	RWA Art. 86 No. 4	imprisonment not exceeding 1 year or be fined not exceeding 5 million won
A person who has violated an order to suspend production	FAT Art. 49 No. 7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1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A person who has produced, displayed, hold or transported the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with intention of sale, without making any indication of type examination, type registration and electromagnetic compatability	RWA Art. 90 No. 3-2	a fine for negligence not exceeding 3 million won
A person who has sold the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or displayed it with intention of sale, without making any indication of type approval,	FAT Art.49 Pra.1 No. 6	a fine for negligence not exceeding ten million won:
A person who altered, converted or reproduced any apparatus that passed type examination or completed type registration or completed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registration	RWA Art.84 No.3	imprisonment not exceeding 3 years or be fined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	–	–
A person who did not report alteration of type examination or completed type registration or completed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registration	RWA Art.92 No.3	a fine for negligence not exceeding 1 million won:
–	–	–

A person who has produced or imported the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which was judged as inferior goods by the investigation or testor who has sold or displayed it with intention of sale while being aware that it was judged as inferior goods;	FAT Art.53 Pra. 1 No.7	a fine for negligenc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 C. Revision proposal of RWA to revise certification system

Revision proposals of RWA provisions regarding certification are below.

- (1) Addition of seller to RWA Art. 46 Par. 1 and revision of sentence of Par. 3 to emphasize duties
- (2) Detailed description of change on certification regarding Par. 6
- (3) Separation of Article 46 Par. 4 and 5 from Article 46 of RWA to establish article of Designation, etc. of Performance Testing Institution and new establishment of Art. 46-2
- (4) New establishment of Article 46-3(Termination of Type Approval) in RWA
- (5) Substitution of Article 46-4(Mutual Recognition of Type Registration and Type Examination and EMC between

States) for Art. 79 Par. 1 in RWA

- (6) Revision of 'When a person is acknowledged to have breached the provisions' of RWA Art. 53 Par.1 to 'When investigation is necessary' to promote flexibility of market surveillance.
- (7) Division of Art. 74 No. 3 into two provisions, No. 3 and No. 3-2 for different actions
- (8) When a person who knows violations of RWA Art.84 No. 3 has used these violated equipments, this provision is revised for such user to be punished.
- (9) New establishment of penalty provision against a person who a certification has been taken by false or unlawful method on RWA Art.84 No. 5
- (10) Referring to FAT Art. 53 Par.1 No. 7, new establishment of penalty provision against a person who has produced, imported, sole or displayed the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which was judged as inferior goods by the investigation or test on RWA Art.84 No. 6

#### **D. Revision of Administrative measures**

Table 4 shows revisions of administrative measures under violation of 'Rules on Certific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quipment(RCITE)' Art. 13 Par. 1.

Table 4 revisions of administrative measures

	Violations	Referred Acts	Administrative measures	
			the 1st violation	the 2nd violation
Before	1. If approved by false or unlawful metho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AT Art. 35, Par. 1, No.1</li> <li>RWA Art. 74 Par. 1, No.1 and Article 75</li> </ul>	Approval cancellation	
After	No revision	No revision	Approval cancellation and destruction · removal order	
Before	2. If the equipment is not satisfy the corresponding technical standa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AT Art. 35, Par. 1, No.2</li> <li>RWA Art. 74 Par. 1, No.2 and Article 75</li> </ul>	Correction order or prohibition of manufacturing/import or removal order	Approval cancellation and destruction/removal order
After	No revision	No revision	prohibition of manufacturing · import and removal · correction order	



Before	3. If certification is not displayed on the equip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AT Art. 35 Par.1 No. 3</li> <li>• RWA Art. 74 Par.1 No.3 and Art. 75</li> </ul>	Correction order	Approval cancellation and removal order
After	No revision	No revision	No revision	removal order
Before	4. If certification is falsely displayed on the equip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AT Art. 35 Par.1 No. 3</li> <li>• RWA Art. 74 Par.1 No.3 and Art. 75</li> </ul>	Correction order	Approval cancellation
After	4. If certification marking rules is violated	No revision	No revision	Approval cancellation and removal order
Before				
After	5. If the technical modification of the equipment is not report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AT Art. 35 Par.1 No. 5</li> <li>• RWA Art. 74 Par.1 No.4 and Art. 75</li> </ul>	Correction order	Approval cancellation

## II. Proposal for Effective Market Surveillance

### A. Detail Procedures of Market Surveillance

The detailed procedures for effective market surveillance of certifi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quipments under FAT Art. 36, RWA Art. 53 and RCITE Art. 10, 13 are needed to be prepared with following contents.

- Plan for annual market surveillance
- Choosing selection criteria of equipment for non-frequent monitoring
- Choosing selection criteria of equipment for intensive monitoring
- Investigation and confirmation of market surveillance are limited to certification, appropriateness of certification marking, fulfillment of reporting modification of equipment.
- Deciding the test and acquisition method of equipment
- Guarantee decision criteria for non-conformity and test scope
- Notifying test, conformation results and measures.
- If the certification recipient desires to be retest, it should be guaranteed.
- Giving a notice before administrative measures
- Executing hearing and in case of administrative measures
- Management of the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quipment used for market surveillance

## **B. Effective Market Surveillance**

- Increase of budget for getting more equipments.
- Paid test by designated testing institute to be able to take rapid administrative measures
- Impose duty on manufacture and importer of DoC declared equipments to keep related equipments and documents for a certain period and send them to certification body
- Detailed itemization and concreteness of administrative measures

### III. Conclusions

- (1) FAT and RWA should impose same punishment on the violation of the same regulation. However, it is not always the case under the current laws. For the consistent and fair application of the law, it is necessary to bring two different standards of punishment in agreement.
- (2) It also requires to make a separate law which stipulates on certification, post-management, violation and MRA at the later stage.
- (3) Reflecting the recent trend that the product cycle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 equipments are getting short, it is recommended to punish any violation by a negligence fine rather than imposing fine or imprisonment, thus speeding up the whole process.
- (4) VCCI in Japan executes the market surveillance pursuant to "The regulation on sampling test for market surveillance." Germany established a separate department for post management within FNA, which is responsible for market surveillance according to the relevant regulations. Referring to the system of advanced countries, it is necessary for us to prepare more specific and transparent regulations on the market surveillance.
- (5) For the import of electrical goods, importers are required to submit a safety certificate to customs. If it can be applied same to the importers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

equipments, we can solve the problems caused by 'Pre-customs clearance & Post-Certification' process to some extent.

- (6) Germany and Japan impose heavy fine against any intentional violator. It can also be considered for the amendment of relevant provision in Korea.

# 목 차

표 목 차 .....	42
그 립 목 차 .....	44
제 1 장 서 론 .....	45
제 2 장 정보통신기기의 시험 · 인증제도 및 체계 .....	47
제 2.1 절 시험 · 인증제도 .....	48
2.1.1 개요 .....	48
2.1.2 시험 · 인증제도의 기능 .....	48
2.1.3 시험 · 인증제도의 파급효과 .....	49
2.1.4 시험 · 인증 절차 .....	50
제 2.2 절 시험 · 인증기관의 지정체계 .....	51
제 3 장 주요국의 정보통신기기의 시험 · 인증제도 .....	54
제 3.1 절 국제 동향 .....	54
제 3.2 절 미국 .....	55
3.2.1 인증제도 .....	55
3.2.2 TCB에 의한 인증 .....	60
3.2.3 인증 절차 .....	64
3.2.4 시험 · 인증기관의 지정체계 .....	65
제 3.3 절 유럽 .....	67
3.3.1 시험인증 관련 법규 .....	67

3.3.2 시험 · 인증제도 .....	67
3.3.3 인증취득 절차 .....	69
3.3.3.1 EMC 지침 .....	70
3.3.3.2 R&TTE 지침 .....	73
3.3.4 시험 · 인증체계 .....	76
제 3.4 절 일본 .....	76
3.4.1 관련 법규 .....	76
3.4.2 시험 · 인증제도 .....	76
3.4.3 인증절차 .....	77
3.4.4 시험 · 인증 체계 .....	77
제 4 장 국내 정보통신기기 시험 · 인증제도 .....	79
제 4.1 절 개요 .....	79
제 4.2 절 인증제도 .....	80
4.2.1 형식승인 .....	80
4.2.1.1 관련법규 .....	80
4.2.1.2 인증대상기기 .....	81
4.2.2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	81
4.2.2.1 관련법규 .....	81
4.2.2.2 인증대상기기 .....	82
4.2.3 전자파 적합등록 .....	84
4.2.3.1 관련 법규 .....	84
4.2.3.2 대상기기 .....	84
제 4.3 절 시험 · 인증체계 .....	85
제 5 장 정보통신기기의 사후관리 .....	87

제 5.1 절 국내 .....	87
5.1.1 사후관리의 목적 .....	87
5.1.2 사후관리 방법 .....	87
5.1.3 사후관리의 세부운영지침 .....	92
5.1.4 사후관리 실적 .....	94
제 5.2 절 독일 .....	96
5.2.1 연방 네트워크 청 .....	96
5.2.2 사후관리 .....	102
5.2.3 사후 관리 절차 .....	103
5.2.4 현장조사 .....	105
5.2.4.1 대상 기기의 확보 .....	106
5.2.4.2 판정 등급별 조치 .....	108
5.2.4.3 사후관리 조치를 위한 절차 .....	111
5.2.5 사후 관리 조치 .....	112
5.2.6 사후관리 실적 .....	113
제 5.3 절 미국 .....	123
5.3.1 사후관리 규정 .....	123
5.3.2 사후관리 조치 .....	125
제 5.4 절 일본 .....	126
5.4.1 사후관리 규정 .....	126
5.4.2 시험 대상의 선정 방법 .....	130
5.4.3 부적합 기기의 처리 절차 .....	131
5.4.4 사후관리 실적 .....	132
제 6 장 SDoC 제도 .....	135



제 6.1 절 서론 .....	135
6.1.1 SDoC 도입의 필요성 .....	136
6.1.2 SDoC의 종류 .....	137
제 6.2 절 외국의 SDoC 제도 .....	138
6.2.1 미국 .....	138
6.2.2 유럽 .....	139
제 6.3 절 국내의 SDoC 제도의 도입 .....	140
제 7 장 결과 .....	142
제 7.1 절 전파법과 전기통신기본법의 인증관련 법규 ....	142
제 7.2 절 사후관리조치에 관한 국내법과 독일법의 비교	156
제 7.3 절 사후관리의 개선 방안 .....	160
7.3.1 사후관리 업무 처리 지침 제정 .....	160
7.3.2 효율적인 사후관리 실시 방안 .....	162
7.3.3 인증 및 사후관리 관련 법령 현황 및 개선방안	163
7.3.4 자기적합선언에 대비한 사후관리 방안 .....	166
제 8 장 결론 .....	167
참고 문헌 .....	169

## 표 목 차

표 1 인증 및 사후관리 관련 전기통신기본법과 전파법 조항 6	
표 2 전파법과 전기통신기본법의 인증관련 법규 비교 .....	8
표 3 전파법의 인증관련 법령 개정안 .....	12
표 4 정보통신기기 인증취소 등의 처분기준 개정안 .....	16
Table 1 Provisions of FAT and RWA regarding Certification and Market Surveillance .....	25
Table 2 Comparison of penalty provisions of FAT and RWA .....	27
Table 4 revisions of administrative measures .....	32
표 3-1 인증의 분류에 따른 특징 .....	58
표 3-2 인증의 분류에 따른 특징 .....	59
표 3-3 시험·인증 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기관의 역할 .....	66
표 3-4 인증대상기기에 대한 적합성 평가 방법 .....	75
표 4-1 국내 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 및 관련 법규 .....	80
표 5-1 정보통신기기의 법규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 .....	90
표 5-2 2004년도 사후관리 실적 .....	94
표 5-3 FNA 조직의 업무 영역 .....	99
표 5-4 현장조사와 대상기기의 확보 및 선정 방법 .....	107
표 5-5 측정 항목의 측정 불확도 대한 EMC 관정 등급 ...	110
표 5-6 파악되고 방문된 유통업체 및 제조업체 수(2004년도)	113
표 5-7 EMC 지침 및 R&TTE 지침에 따른 사후관리 실적 ....	114

표 5-8 R&TTE 제품군에 속하는 제품의 예 .....	115
표 5-9 EMC지침 제품군에 속한 제품의 예 .....	116
표 5-10 보호요건에 대한 적합성 조사 결과 .....	117
표 5-11 EMC 지침 제품군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	118
표 5-12 R&TTE 지침 제품군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	119
표 5-13 3단계 판정등급(2003년도) .....	119
표 5-14 판매중지 제품 개수 .....	122
표 5-15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실적 .....	122
표 5-16 세이프 가드 적용 실적 .....	123
표 5-17 시장발체시험에 관한 규정 .....	128
표 5-18 사후관리 시행 방법 .....	130
표 5-19 사후관리 결과의 처리 절차 .....	131
표 5-20 시장발체시험 실시 실적(2004년도) .....	133
표 5-21 판정 기준 .....	134
표 6-1 SDoC의 종류 .....	137
표 6-2 SDoC 종류별 세부 내용 .....	138
표 6-3 미국의 SDoC 현황 .....	139
표 7-1 인증 및 사후관리 관련 전기통신기본법과 전파법 조 항 .....	142
표 7-2 전파법과 전기통신기본법의 벌칙 규정 비교표 .....	144
표 7-3 전파법의 인증관련 법령 개정안 .....	149
표 7-4 정보통신기기 인증취소 등의 처분기준 개정안 .....	154
표 7-5 독일 EMC 법의 처벌 규정 .....	156
표 7-6 독일 EMC법에 대응한 국내법의 처벌 규정 .....	157
표 7-7 인증 및 사후관리의 현황 및 개선방안 .....	163

## 그 립 목 차

그림 2-1 시험인증 절차 .....	50
그림 2-2 정보통신기기 시험 · 인증기관의 지정 체계 .....	52
그림 3-1 FCC 인증제도 .....	58
그림 3-2 FCC와 TCB 인증 건수 추이 .....	61
그림 3-3 TCB 제도에서의 시험 · 인증절차 .....	64
그림 3-4 미국의 시험 · 인증기관의 지정체계 .....	65
그림 3-5 EMC 인증절차 .....	72
그림 3-6 유럽의 기술기준 시험 · 인증체계 .....	76
그림 3-7 일본의 기술기준 시험 · 인증체계 .....	78
그림 4-1 국내의 기술기준 시험 · 인증체계 .....	85
그림 5-1 부적합 사유 .....	95
그림 5-2 행정처분 내용 .....	95
그림 5-3 FNA 조직도 .....	98
그림 5-4 Technical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4)의 조직도 .....	100
그림 5-5 3단계 판정 원칙 .....	109
그림 5-6 사후관리 조치를 위한 절차도 .....	111
그림 5-7 EMC 지침에 따른 제품형식의 부적합성 평가 결과 · 120	
그림 5-8 R&TTE 지침에 따른 지침에 따른 제품형식의 부적합성 평가 결과 .....	121
그림 5-9 VCCI의 조직도 .....	127
그림 5-10 사후관리 절차 .....	129

## 제 1 장 서 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질적·양적 확대와 더불어 이용자의 급증을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통신시장의 환경변화는 그 규모나 내용면에서 과거와 많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간 공정경쟁, 이용자 이익의 보호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유선과 무선, 음성과 데이터, 통신과 방송의 대체·융합은 기존의 서비스 간 고유영역의 구분과 정보통신기기를 분류하는 현재의 분류 체계가 여전히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 관련 법령은 정보화촉진기본법을 근간으로 분야별로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각 개별법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 규정들이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있다 보니 그 내용이 중복되거나 유기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된 각종 규제의 일관성·중복성·적법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신규서비스 및 장비의 도입과 활성화와 이용자의 후생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보통신기기인증은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파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강제적인 인증 제도로써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기기를 제조, 수입,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기기에 적용되는 인증을 받고 이에 관한 표시를 제품에 부착하여 유통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증제도는 대상기기에 적용된 법령에 따라 인증절차 및 위반 시 처벌내용이 달라 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기본법은 기본법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설비나 자재 등의 하드웨어에 한정되는 내용만을 담고 있다. 따라서 전기통신기본법이 실질적인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법체계의 개편이 요구된다.

1990년 초 UR 협정 체결 및 WTO체제의 출범 이후 세계화를 향한

국제 무역 환경 속에서 정보통신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약화되면서 민간기구의 역할이 강화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 시장이 국경의 구분 없이 오직 우수한 기술력과 시장 점유 능력에 의해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진국과 대등하게 무역 교류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자국의 통신 시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시험인증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시험인증제도는 '어떤 제품, 절차 및 서비스가 특정 표준과 각종 인증 요구조건을 만족하는지 검증·평가하는 시험, 인증, 인정 등과 같은 일련의 행위로 구성되는 이른바 적합성 평가(CA;Conformity Assessment) 메커니즘 범주 내에서 다루어지는 것으로, 표준 및 관련 인증 요구 조건에 적합하면 인증서(Certificate)로 그 사실을 보증해 준다.

그러나,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고객을 만족시키고 저질의 제품으로부터 시장을 보호하는 시험 인증제도가 기술력이 없는 국가나 기업에게는 하나의 기술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국의 시험 인증 제도 운영 사례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보통신분야의 각종 장비 및 제품의 인증절차 간소화 및 국제 인증 제도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민간 중심 시험·인증제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법령의 개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기기의 종류에 따른 형식검정·등록, 형식승인, 전자파 적합등록으로 분류되어 있는 인증 제도를 하나의 통합된 인증 제도로 만들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며, 정보통신기기의 인증과 관련하여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벌칙, 인증취소 요건 등의 양형 기준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 제 2 장 정보통신기기의 시험·인증제도 및 체계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시험인증제도는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가 아무런 위해 발생 없이 통신망에 접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이용자 상호간에 선의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주어진 기술기준과 국제 협약, 국제 규정들을 준수하여 통신망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WTO 체계 이전 세계의 주요 국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중통신망에 장애나 위해, 고장을 일으키지 않고, 다른 이용자에 대해서도 피해를 주지 않도록 국가가 시장 출시에 앞서 의무적으로 실제 규격과 실제 특성을 사전 심사하여 적합성 인증을 획득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와 통신망을 보호함과 동시에 자국의 정보통신 시장을 보호하였다.

하지만 WTO 체제 출범 이후에는 인증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상당부분 감소됨에 따라 그 역할이 민간으로 점차적으로 옮겨가는 추세에 있다. 즉, 이전에 국가에서 법적으로 규제하던 부분을 통신 사업자나 제조업체, 시험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시험·인증을 위한 조직과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는 구조로 변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선진국들이 정보통신기기의 시험·인증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소비자에게 보다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만족시킴으로써 해당 산업을 성장시키고, 외국에서 생산된 저가의 저질 제품이 시장에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만드는데 있다.

## 제 2.1 절 시험 · 인증제도

### 2.1.1 개요

세계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정보통신 관련 시험 · 인증제도는 어떤 제품, 절차 및 서비스가 각종 인증 요구조건을 만족하는지 검증 · 평가하는 시험(Testing), 인증 (Certification), 인정(Accreditation), 지정 (Designation) 등과 같은 일련의 행위로 구성되는 이른 바 적합성 평가 (CA Conformity Assessment) 메커니즘 범주 내에서 다루어진다. 이는 일반적으로 정부와는 독립적인 제3자 기관에 의해 운영되어 최종적으로 관련 인증 요구조건에 적합하면 인증서(Certificate)로 그 사실을 보증해주는 절차로 구성된다고 국제 표준화기구인 ISO/IEC Guide 28(제품의 제3자 인증제도 모델에 대한 일반적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시험 · 인증제도는 자국의 통신 환경이나 통신 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축된다.

시험 · 인증제도에 대하여 정부당국은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장의 자유화와 시장 보호 및 국제 무역 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시험 · 인증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조자는 시험 · 인증제도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수출용 제품의 설계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 및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야 하며 시험 및 인증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는 방법으로 시험 · 인증제도에 접근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시험 · 인증제도를 통하여 보다 높은 품질의 제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제품의 선택 폭이 넓어 이득을 볼 수 있게 된다.

### 2.1.2 시험 · 인증제도의 기능

일반적으로 제품에 대한 시험 · 인증제도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의 기능을 갖는다. 첫째,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해당 기술기준과 인증 요구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증·평가하는 인증의 사전적인 기능이



다. 둘째, 인증된 제품의 품질이 인증되기 전의 상태와 동일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인증의 사후 관리적 기능이다. 즉, 사후 관리는 제품의 제조업체가 해당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인증기관, 시험기관, 정부 관계자 등이 검증하고 그 결과를 인증기관에 보고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후 관리 활동은 인증된 제품이 지속적으로 그 제품에 해당되는 기술기준 및 시험·인증 관련 요구조건을 충실히 만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와 인정받은 시험·인증기관이 인정받을 당시의 인정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험 및 인증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정시험·인증기관의 사후관리가 있다.

### 2.1.3 시험·인증제도의 파급효과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 및 서비스가 공인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이용자가 신뢰감을 갖고 그들 제품을 구입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제품의 품질 이상으로 인하여 공급업체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시험기관 이나 인증기관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안정적으로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시험·인증 제도에 의해 품질이 보장된 제품에 대한 선택 폭을 보다 넓힐 수 있다.

정부는 안정적인 시험·인증제도의 구축 및 구현으로 자국의 정보통신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으며, 국가 간의 무역 교류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제적 이익 추구를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자국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수입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유통시킴으로써 체계적인 시장 질서를 확립시킬 수 있다.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는 보다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의 개선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자연스럽게 유발되는 제품 간의 품질 경쟁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위한 인적·물적 투자를 함으로써 관련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얻게 되어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시험·인증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면 이용자는 고 품질의 제품 및 서비스와 보다 다양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이용자의 불만 사항이 법과 제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하게 된다.

#### 2.1.4 시험·인증 절차

일반적으로 시험·인증 절차는 그림2-1과 같다. 인증 신청자가 미리 시험기관에 제품 및 서비스의 시험을 의뢰하여 시험의 결과로 시험 성적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 시험성적서, 기타 인증기관에서 요구하는 인증 심사 자료와 같은 인증 신청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시험인증기관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직접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품과 함께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게 되고 인증기관이 직접 혹은 인정기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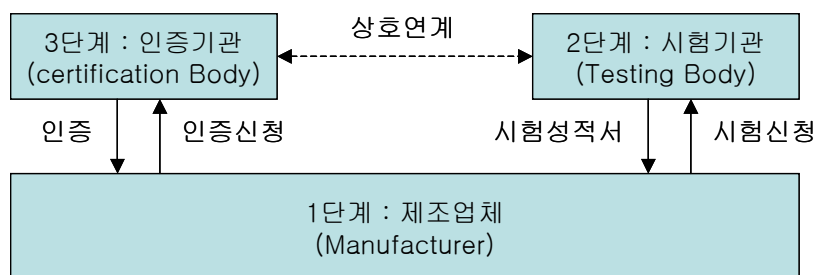


그림 2-1 시험인증 절차

인증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심사를 1차적으로 자체 심사(주로 관련 서류의 구비 여부 등)하고, 서류 심사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인증기관이 구성·운영하는 인증심사위원회 등과 같은 조직에 의한 2차적인 기술적 심사(주로 해당 기술기준의 적합 여부 등)를 하게 하여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한다.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기술적 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기관은 신청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해 주거나 인증 신청을 보완해 주도록 요구하며,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산화하여 등록·관리하여 모든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험·인증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정보통신 제품에 대한 시험과 더불어 공장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할지라도 생산 공정이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지 못해 불량품이 발생하게 되면 인증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 생산시스템이 항상 동일한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 제 2.2 절 시험·인증기관의 지정체계

정보통신기기 시험·인증체계는 ISO/IEC의 해당 국제규범에 따라 시험결과 및 인증서가 국제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림 2-2와 같이 지정기관(Designation Authority), 인정기관(Accreditation Body), 인증기관(Certification Body), 시험기관(Testing Body)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정기구는 정보통신기기 기술기준에 대한 시험·인증 프로그램과 인정 프로그램을 개발 관리하며, 시험기관을 지정하고 사후 관리하는 활동을 한다. 주로 정부기관이 이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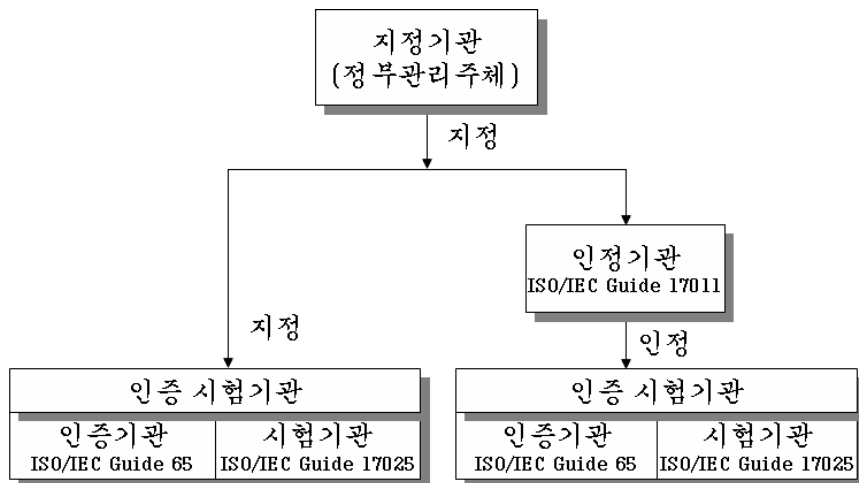


그림 2-2 정보통신기기 시험·인증기관의 지정 체계

인정기관은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을 인정하고, 대내적으로는 시험인증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또는 정부가 운영하는 위원회 등이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 상호인정 정책을 총괄하는 대표기구 성격을 갖는다. 인정기관은 적합성 평가기관을 평가하고 인정하는 인정기구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ISO/IEC Guide 17011에 부합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인정기구로부터 제품에 대한 인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인정받아, 시험기관의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Test Report)와 기타의 인증기관이 정하는 요구조건을 근거로 하여 인증서(Certificate)를 발급하고, 또한 각종 시험인증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등록 관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보급·활용하는 업무 수행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인증기관은 주로 정부와는 독립적이고도 중립성이 보장되는 제3자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증기관은 ISO/IEC Guide 65를 만족하여야 한다.

ISO/IEC Guide 17025를 만족하여 인정기구로부터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시험기관은 해당 기술기준에 대한 제품의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기술기준에 대한 적절한 시험방법, 시험규격 및 시험도구 등을 개

발하여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결과로서 시험 성적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시험인증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면 시험 및 인증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시험·인증기관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참고로 ISO/IEC Guide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SO/IEC Guide 17025 : 교정 및 시험기관의 자격에 관한 일반 요건 (General requirements for the competence of calibration and testing laboratories)
- ISO/IEC Guide 17011 : 평가기구 및 인정기구의 일반요건(General requirements for bodies providing assessment and accreditation)
- ISO/IEC Guide 65: 제품인증기관의 일반요건(General requirements for bodies operating certification systems)

## 제 3 장 주요국의 정보통신기기의 시험 · 인증제도

### 제 3.1 절 국제 동향

최근 정보통신서비스의 글로벌화와 기술혁신에 따라 광대역통신망과 인터넷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서비스 고도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정보통신시스템 및 기기 간 상호접속 · 운용성 확보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정보통신 제품에 대한 활용성이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결함에 따른 비용과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품질 보장을 위한 정보통신기기 시험 · 인증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미국 등의 주요국들은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한 시험 · 인증제도를 국제 규범(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EC(International Electromechanical Commission) Guide)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대국의 시험 · 인증 관련사항을 상호 인정함으로써 기술 환경이 다른 상대국으로의 시장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 차원의 시험 · 인증제도 이외에 민간 주도의 시험 · 인증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운영하는 시험 · 인증기관을 별도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통신위원회(FCC :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연방규정집(CFR:)을 개정하여 국가 즉, FCC에서만 수행하던 인증 업무를 일부 민영화함으로써 인증기관을 복수화하고 인증제도를 간소화하였으며 제조자 적합성 선언을 하는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및 Verification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EU는 무선기기와 통신기기에 대해서 TTE Directive를 R&TTE Directive로 대체하여 EU 규정의 통합화 및 표준화를 가속화하고 신제품 출시 및 신기술의 소개를 용이하게 하여 EU 역내에서의 자유로운 무역을 촉진하고 있다. 국

내의 경우, 정보통신 제품의 기술기준에 대한 시험·인증은 전파연구소  
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 제 3.2 절 미국

### 3.2.1 인증제도

FCC는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 방안으로 주요 전기·전자제품  
에서 발생하는 불요 전자파(EMI)를 강제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는 연방통신법에 의거하여 규제가 실시되며 위반 시에는 법에 따라  
제품의 수입·판매·전시 및 광고 등 유통전반에 걸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통신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임무가 있으  
며, 의회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으로써 무선·방송·수신기 및 위성케이블  
에 의한 각 주 및 국제적인 통신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이행하는 독  
립적인 정부대리 기관이다.

FCC는 제품에 따라 인증 절차를 구분하여 무선기기나 EMI기기의 인  
증은 공학기술부(OEC:Office of Engineering & Technology)에서, 단말  
기기에 대한 모든 처리는 통신사업국(CCB:Common Carrier Brueau)에서  
처리한다. 무선기기나 전자파장해(EMI) 분야에 대해서 승인  
(Certification)인증제도, 적합성 선언(DoC) 인증제도, 제조자 적합선언  
(SDoC) 인증제도, 입증(Verification) 인증제도의 4가지 인증절차로 구분  
하여 운영하고 있다.

#### 가. 승인(Certification) 인증제도

Certification 인증제도는 의도적으로 전자파에너지를 사용하는 송신  
기 및 일부 수신기 등과 같이 전자파를 많이 발생하는 제품은 통신체계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FCC의 지정된 시험소에서 시험  
을 한 후, 시험성적서 및 관련서류 등을 FCC 또는 민간인증 기관인  
TCB(Telecommunication Certification Body)에 신청하여 인증서를 받

급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승인을 얻은 경우 FCC ID 번호와 적합선언 문구(Compliance Statement)를 표시한 다음 사용설명서에 필요한 FCC Notice를 넣는다. 이 때 FCC 인증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FCC는 TCB(Telecommunication Certification Body)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FCC의 고유 권한이었던 인증업무를 민간기관인 TCB에 일부 이양함으로써 인증기관의 민간화 및 복수화를 도모하였다. 이렇게 하면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민간 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면 FCC가 그 인증서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

#### 나. 적합성선언(DoC) 인증제도

DoC 인증제도는 승인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차원에서 일부제품에 대하여 NIST (National Voluntary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에 의하여 관련규정(NVLAP:National Voluntary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에 따라 인정된 시험소(Accreditation Laboratory)에서 FCC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시험 한 후, 이 시험소에서 발행한 성적서에 의하여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제품에 관련 마킹을 부착하여 직접 출하할 수 있는 제조자 자체선언 방식이다.

Class B에 해당하는 퍼스널 컴퓨터와 주변기기들, 그리고 ISM 기기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등)들은 NVLAP에 의한 DoC 또는 TCB에 의한 Certification으로 승인 받아야한다. 제조자는 A2LA 또는 NVLAP 지정시험기관에서 제품을 시험하여 시험 성적서를 준비하고 제품에 FCC Mark를 표시하고 사용자 설명서에 FCC Notice를 넣은 다음 Declaration of Conformity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이 때 별도의 FCC 인증비용은 없다.

#### 다. 제조자 적합선언(SDoC) 인증제도

SDoC 인증제도는 전화 단말기의 등록절차로 TCB에 신청하는 경우와 인증된 시험소에서 기기를 시험한 규격일치의 확인서를 전화사업자 연합(ACTA;Administrative Council for Terminal Attachments)에 등록



하는 인증제도이다.

전화사업자연합은 FCC가 규제완화와 CPE(Customers Premise Equipment) 제조업체 간에 보다 활발한 시장 경쟁을 유도하고 한편으로는 전화 네트워크 구축에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전화, 팩스 및 모뎀 등 일부 통신제품에 적용되어오던 기술 규격 및 일치 여부에 대한 FCC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철폐하고 CPE로 불리는 통신관련 제품들의 기술 표준을 정하는 절차를 위임한 민간기관이다.

#### 라. 입증(Verification) 인증제도

Verification 인증 제도는 장비 제조자나 수입자가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시험한 후, 자체 인증하는 방식으로, DoC 또는 Certification이 요구되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 이 인증제도를 적용한다. 이 인증제도를 이용하여 불요전자파를 발생시키는 제품이라도 전반적으로 제품의 Noise Level이 안정되어 있고 통신수단이나 다른 제품의 동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제품에 대하여 제조자가 직접 관련 FCC 규정에 따라 제품을 시험하고 만족할 경우는 별도의 확인 없이 미국에 제품을 출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조자는 FCC에 등록된 시험기관에서 제품을 시험하여 FCC에서 볼 수 있는 Verification 기록을 보유한 다음 적합선언문구 (Compliance Statement)를 제품에 표시하고 FCC Notice를 사용설명서에 넣어야 한다. 이 경우, FCC ID 및 별도의 인증비용은 필요하지 않다.

표3-1은 인증제도의 주요 절차를 요약하고 있다. .

표 3-1 인증의 분류에 따른 특징

인증구분	시험기관	등록
Certification	공인시험기관	FCC Grand Code 부여받음
DoC	공인시험기관	자체 자료보관
SDoC	제조사 부설시험기관 또는 제3의 시험기관	ACTA 등록
Verification	제한없음	자체 자료보관

그림3-1은 인증절차의 특징으로 화살표의 방향으로 인증절차가 복잡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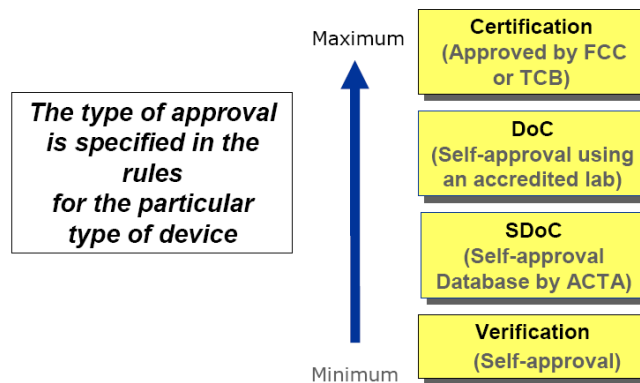


그림 3-1 FCC 인증제도

표3-2는 인증절차에 따른 대상기기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표 3-2 인증의 분류에 따른 특징

Verification	SDoC	DoC	Certification <sup>(2)</sup>
Most ISM Equipment		Cable System Term. Device	Cable System Term Device
TV & FM Receiver		PC's & Peripherals	<i>PC's &amp; Peripherals<sup>(1)</sup></i>
All Other Digital Devices		Most Receivers	Most Receivers
Pt-to-Pt Microwave		TV Interface Devices	TV Interface Devices
Broadcast Transmitters		Consumer ISM Equipment	Consumer ISM Equipment
Aux. Broadcast Transmitters	Telephone Equipment		<i>Telephone Equipment<sup>(1)</sup></i>
INMARSAT Equipment			Most transmitters
406 MHz ELT			Scanning Receivers
CATV Relay Transmitters			
(1) FCC는 더 이상 이 장비에 대하여 인증을 하지 않지만, 이 장비는 TCB에 의해서 인증된 수도 있다.			
(2) 몇 가지 제품에 대하여 제조자는 DoC나 승인을 선택할 수 있다.			

### 3.2.2 TCB에 의한 인증

미국은 세계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시험·인증의 상호 승인을 가능하게 하고 기기의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민간화와 복수화 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인증기관인 TCB를 도입함으로써 FCC의 고유 업무이던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인증 업무의 일부를 민간기관으로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FCC 인증 절차의 변경 안이 1998년 12월에 채택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그 동안 기기의 인증서 발급을 FCC에서만 하던 것을 민간 인증기관인 TCB를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자는 TCB나 FCC를 선택하여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TCB는 인증과 관련된 기기를 승인하기 위하여 인정기관에 의해서 인정되어 FCC에 의해서 지정된 ISO/IEC Guide 65에 의해 NIST로부터 인정된 인증기구이다. TCB는 제3의 독립된 인증기관으로 제조사는 제외된다. 외국의 기관 역시 정부 간의 상호인정협정(MRA)에 따라 TCB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한 국가에서도 민간 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면 FCC가 그 인증서를 인정하게 된다. TCB는 제품 인증을 수행함에 있어 제품 인증 신청 자료 및 승인서 사본을 FCC로 송부하고 FCC가 요구할 경우 승인한 제품의 리스트 혹은 제품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후관리 활동이나 그와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FCC는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임을 발표하고 새로운 감시 체계 확립을 위하여 감시국(Enforcement Bureau)을 만들고 감시 업무를 FCC의 중요 임무로 하고 있다.

그림3-2는 연도별 TCB와 FCC 인증 건수의 추세이며,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TCB 인증이 매년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6년 현재 약 40개의 TCB가 지정되어 있으며, 2006년 7월까지 961건의 승인서 중 27건만 FCC에서 인증서가 발행되었으며, 약 97%이상이 TCB에서 인증서가 발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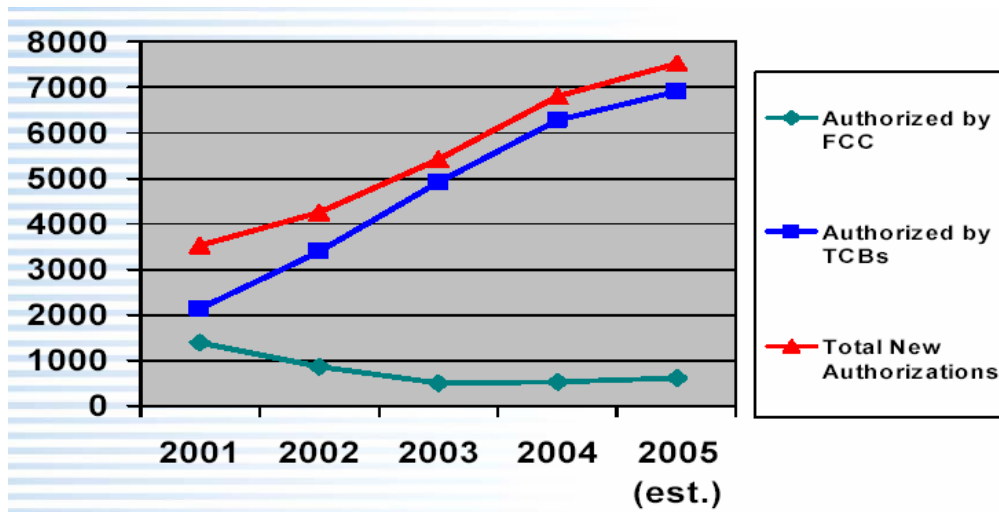


그림 3-2 FCC와 TCB 인증 건수 추이

TCB 권한의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TCB의 요건

- ISO/IEC Guide 65에 부합하여야 함
- ISO/IEC Guide 17025에 부합하여 시험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함
- FCC 규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여야 함
- 해당 FCC 해석의 인식 및 적용 능력을 증명하여야 함
- 적절한 교육 훈련에 참가하여야 함

#### 나. TCB의 권한

- FCC의 규정과 정책에 따른 제품의 인증
- 제품의 TCB 인증은 FCC 승인에 상응하다.
- ISO/IEC Guide 17025의 요구조건을 따르는 시험소의 데이터를 인정하여 불필요하게 시험을 반복하지 않는다.
- 인증서 발행 후 30일 이내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다. TCB의 한계

- 반드시 FCC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시장 감시활동을 할 수 없다.
- 규정에 없는 제품을 인증할 수 없다.
- 인증서 발행 후 30일 이 후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
- 유선전화장비를 제외하고 승인권(Grantee Code)의 이양이 인정될 수 없다.

#### 라. TCB에 대한 FCC의 역할

- FCC는 미 표준기술원(NIST) 또는 NIST의 대행 인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을 TCB로 지정한다
- FCC는 TCB를 관리 감독한다.
- FCC는 MRA에 따라 외국지정기관이 지정한 TCB를 인정한다.
- FCC는 관련 규정에 따라 TCB의 지정을 취소시킬 수 있다.
- FCC는 지정된 TCB의 목록을 발간한다.

#### 마. TCB의 인증 대상기기

FCC 규정과 공평하게 취급하여 TCB에 의한 기기인증이 FCC의 인증과 호환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ISO/IEC Guide 17025의 요건에 따른 시험소의 시험성적서가 인정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재시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은 TCB에서 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의 범위이다.

- 허가 받지 않고 사용하는 무선기기(Unlicensed Radio Frequency Devices)
  - 1GHz 이하의 주파수에서 작동하는 소출력 트랜스미터 (Spread Spectrum Devices 제외), 비상 경고 시스템 (Emergency Alert Systems), 의도되지 않은 방사체 (Unintentional Radiators) (예, Personal Computers 및 관련된 주변기기, TV 인터페이스 기기, 등) 및 Certification이 필요한 ISM 기기 (예,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RF 조명기기, 및 기타 ISM 기기 등).

- 1GHz 이상의 주파수에서 작동하는 소출력 트랜스미터 (Spread Spectrum Devices 제외).
- 면허가 필요 없는 PCS (Personal Communication System) 기기.
- 면허가 필요 없는 국가정보기반시설(UNII:Unlicensed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기기 및 Spread Spectrum 기술을 사용하는 소출력 트랜스미터.
- 허가 받고 사용하는 무선기기(Licensed Radio Service Equipment)
  - CFR Parts 22 (cellular), 74, 90, 95 및 97에 따른 PCS (Personal Mobile Radio Services).
  - CFR Parts 22 (non-cellular), 74, 90, 95, 및 97에 따른 GMRS (General Mobile Radio Services).
  - CFR Parts 80 및 87에 따른 해상 및 항공 라디오 서비스 .
  - CFR Parts 21, 74 및 101에 따른 마이크로웨이브 라디오 서비스.
- 전화단말기(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 전화기, 모뎀 등의 유선통신 기기 .

#### **바. TCB의 인증 예외 기기**

- TCB에서 승인되지 않는 기기
  - 신기술이 적용된 기기
  - FCC에서 시험절차가 승인되지 않거나 개발되지 않은 기술이 적용된 기기
  - TCB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전파노출(RF Exposure) 평가를 요구하는 기기
  - 전파노출의 “예외항목”에 있는 기기들
- 비승인 기기의 예
  - UWB, Acces BPL, DFS 기기 등

#### **사. FCC의 TCB 관련 규정**

- Section 0.241 (g) 지정권 위임(신규) - Section 2.960 및 2.962에 따

른 TCB 지정을 수행하도록 OET에 권한을 위임

- Section 0.291 (i) 지정권 위임(신규) - Section 68.160 및 68.162에 따른 TCB 지정을 수행하도록 CCB에 권한을 위임
- Section 2.960 TCB의 지정(신규)
- Section 2.962 비고의적 방사기기의 인증(개정)
- Section 15.101 TCB의 지정(신규)
- Section 68.160 TCB의 지정(신규)
- Section 68.162 TCB의 지정(신규)

### 3.2.3 인증 절차

승인 인증제도만이 FCC나 TCB에서 수행하는 인증이다. 즉 승인 대상 장비에 대하여 인증 신청자는 자체 시험성적서나 지정시험기관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FCC나 TCB 중 한 곳의 인증기관을 선택하여 인증을 신청하고 해당 인증기관은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인증서를 발급한다. 그림 3-3은 TCB 제도에서의 시험·인증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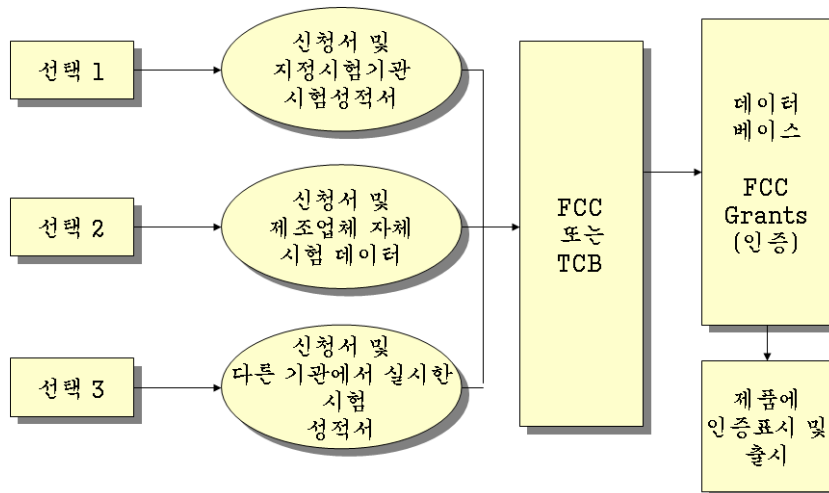


그림 3-3 TCB 제도에서의 시험·인증절차



### 3.2.4 시험·인증기관의 지정체계

미국의 시험·인증기관의 지정 체계는 그림3-4와 같으며, 기술기준 분야의 경우 FCC가 지정기관으로 인정기관의 역량을 평가·승인하는 기준 및 조건인 NVCASE(National Voluntary Conformity Assessment Systems Evaluation)에 의하여 인정기관을 지정한다.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는 1994년에 NVCASE를 설치하였으며 그것의 시행 규칙은 FCC 규정집의 15 CFR Part 286에 명시되어 있다. NVCASE 프로그램은 다른 나라의 정부간 MRA(APEC MRA, CITEL MRA)에서 지정된 CAB(Conformity Assessment Bodies)를 위한 지정기구로서의 NIST의 의무를 지원한다. 또한 CAB 평가가 요구될 때, NIST는 다른 정부 규제기관으로부터 받는 요청을 지원한다. 더욱이 산업체는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NVCASE하에서 NIST는 NIST로부터 인정된 인정기구에 의해서 인정된 적합성 평가기구를 규제국에 추천한다. 자격을 인정받은 CAB는 외국의 의무조건을 만족하거나 미국 또는 국제 규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품을 시험하고 인증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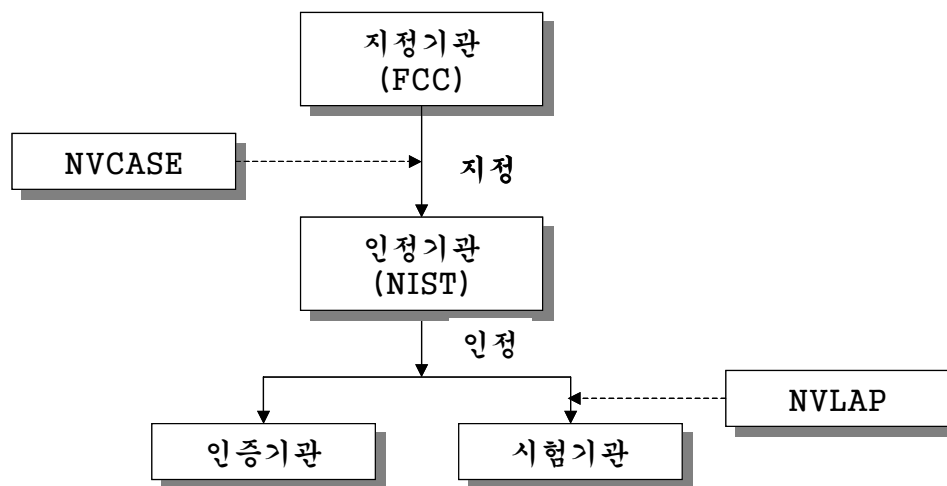


그림 3-4 미국의 시험·인증기관의 지정체계

NIST는 인정기관으로서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의 인정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는 NVLAP(National Voluntary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에 의한 시험기관을 인정할 수 있다. NIST 등의 인정기관에 의하여 인정된 시험·인증기관은 시험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표3-3은 시험·인증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기관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표 3-3 시험·인증 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기관의 역할

		담당기관	역할
지정기관(DA)		FC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정기관지정</li> <li>NVCASE에 의한 인정기관 역량 평가</li> </ul>
인정기관(AB)		NI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SO/IEC Guide 61에 부합</li> <li>ISO/IEC Guide 58에 부합</li> <li>별도의 AB 운영가능</li> </ul>
적합성평가 기관 (CAB)	인증기관 (CB)	지정인증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SO/IEC Guide 65에 부합</li> <li>인증업무 수행</li> </ul>
	시험기관 (TB)	지정시험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SO/IEC Guide 17025에 부합</li> <li>시험업무</li> <li>NVLAP에 의한 시험기관 역량 평가</li> </ul>

#### ○ 인증기관 지정 체계의 특징

- 민간 인증기관으로 통신기기 인증기관인 TCB를 지정하는 절차를 수립함
- 제조자는 기기인증을 받기위해 TCB 또는 FCC를 선택할 수 있음
  - 민간인증이 가능한 품목 예: 송신기, 스캐닝수신기, 단말장치 등
- NIST는 미국의 적합성 평가기관(CAB)의 지정기관임

- MRA가 시행되는 국가에 대해 외국의 지정기관을 인정함
- 인정기관은 ISO/IEC Guide 61과 58에 부합해야함
- 인정된 TCB는 ISO/IEC Guide 17025와 65에 부합해야함

## 제 3.3 절 유럽

### 3.3.1 시험인증 관련 법규

- 통신 단말장치 형식승인 상호인정지침 (CEC Directive 86/361/EEC ; Exchange test reports for TTE) : NET로 규정한 강제 시험 사항 지정(CEC ; THE COUNCI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통신용단말장치 적합성 상호인정 법적지침 (CEC Directive 91/263/EEC ; Mutual recognition of approvals for TTE) : 이 지침에 따른 표준을 CTR(Common Technical Regulation)이라 하며 CTR 의 제정을 위하여 기존의 TRAC(Technical Regulations Application Committee)의 역할을 변경하고 새로이 ACRE(Approval Committee for Terminal Equipment)를 설립

### 3.3.2 시험 · 인증제도

EC 시장통합의 일환으로써, 지역 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적 장벽제거를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EC 이사회에서 의결되었고, 그에 따라 신체, 안전, 건강, 환경,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통일된 규제방안이 채택되었다. EC 통합이 적극 추진되면서 기존의 인증제도는 거의 그대로 두고, EC 차원의 새로운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회원국가에게 통일되게 시행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현재 유럽에서는 각 국가별로 자국의 규격과 기술규정에 소비되는 상품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인증제도를 갖고 있으면서, 유럽지역차원의 인증제도도 실시되고 있으나, 1985년 새로운 접근(New approach)의 채택으로 기존의 EC 차원의 인증제도를 보다 포괄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자는 방

침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역내 회원국들의 인증제도를 제조자가 맞추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새로운 접근방식은 유럽표준화절차가 새로운 접근지침에 관련되는 표준을 설정하는 데 반해 행정당국은 기기들이 필수요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 새로운 접근방식이 유럽표준화가 민주성, 투명성, 독립성, 관계자들의 과정 참여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어떤 표준이 "최고의 기술수준"이라는 것에 모든 관계자들이 동의하도록 배려한다.
- 유럽연합 집행이사회와 국가기관은 위임이 위탁된 표준화활동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그들은 공식적인 형태로 관찰을 공식화 할 수 있다.
- 이런 이유로 새로운 접근지침은 표준화절차의 보장에 따라 채택된 조화된 표준의 기술적 내용이 위원회 차원이나 국가 차원에서 입증되어야 한다.

1990년 12월 제품의 규격 및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을 평가 하는 시험 및 인증 제도가 총괄적 접근방식(Global Approach)으로 통일되면서 각 제품별로 달리 적용하던 인증 절차나 인증마크를 통일하고 범 유럽 차원의 시험인증기관(EOTC;European Organization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이 설립되면서 EU 집행위에서 총괄하던 인증 업무를 1993년부터 EOTC에서 관장하고 있다.

CE마크는 EU 공동의 강제적인 규격인증제도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EU 역내에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 안전, 위생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 품목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강제 규격이다. CE 마킹은 EU 공동규격(EN)에 대한 적합성 인증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각 대상 품목별 지침에 정해진 인증 모듈에 따라야 하며, 각 회원국은 CE 마크의 사용과 부착

에 있어서 지침과 규격의 위반 사항을 발견 할 경우 해당제품의 회수는 물론, 적합성 인증서에 서명한 제조업자나 역내 수입·유통업자에 대해 법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EOTC는 인증대상을 17개 품목 군을 정하고 이들에 대해 적용할 8개의 인증 방식(Module)을 마련하여 각 지침에서 관련제품이 어떤 방식의 모듈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를 규정한다.

CE마크는 품질에 대한 보증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안전조건(필수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수단이며, 이 마크만 부착하면 EU 지역 내에서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다

### 3.3.3 인증취득 절차

CE의 인증절차는 8개의 모듈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이 어느 모듈의 승인방식을 따라야 하는지는 각 지침(Directive)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적합성 평가를 위한 기본 모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모듈 A(Internal control of production ; 자체생산관리) : 제조자는 설계와 생산단계를 자체관리하며 공인시험기관(NB)의 검사가 반드시 필요치 않다. 제조자가 기술 문서를 작성하고 자기적합선언(Doc)으로 CE마킹을 하다.(대부분의 제품이 여기에 해당됨)
- (2) 모듈 B(EC-type examination ; 형식검사) :설계 단계와 관련되나 생산단계 평가모듈로 보완되어야 한다. NB에 의해 CE 형식검사 인증서가 발급된다.
- (3) 모듈 C(Conformity to type ; 형식적합성) : 모듈 B를 보완하는 생산단계 모듈로서, 모듈 B의 CE 형식검사 인증서에 기재된 형식 적합성을 입증하며 NB에 의한 인증이 요구되지 않는다.
- (4) 모듈 D(Production quality assurance ; 생산품질 보증) : 모듈 B를 보완하는 생산단계 모듈로서, 품질 시스템 EN ISO 9001에 기초하여

NB에 의해 제조자의 품질 시스템이 승인되어야 한다.

- (5) 모듈 E(Product quality assurance ; 제품품질 보증) : 모듈 B를 보완하는 생산단계 모듈로서, 품질시스템 규격 EN ISO 9001에 기초하여 NB에 의해 제조자의 품질 시스템이 승인된다.
- (6) 모듈 F(Production verification ; 제품검증) : 모듈 B를 보완하는 생산단계 모듈로서, 품질시스템 규격 EN ISO 9001에 기초하여 NB에 의해 제조자의 품질 시스템이 승인되어야 한다, NB는 CE 형식검사 인증서에 명시된 형식 적합성을 검사·확인하고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한다.
- (7) 모듈 G(Unit verification ; 단위검증) : 설계 단계와 생산 단계가 모두 관련된 모듈로서 NB는 제품 하나하나 별도로 검사하고, 동시에 각 제품의 설계와 생산단계도 각각 검사한 후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한다.
- (8) 모듈 H(Full quality assurance ; 완전품질검증) : 설계단계와 생산단계가 모두 관련된 모듈로서 품질 시스템 규격 EN ISO 9001을 기반으로 한다. NB는 제조자의 품질 시스템을 감시한다.

CE 마킹 제품의 지침 규격 적합성 평가절차를 위한 8개의 모듈 가운데 모듈 A,G,H 또는 모듈 B+C, B+D, B+E, B+F로 평가 받을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설계단계와 생산단계 모두에 대해 적합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모듈 A,G,H는 설계평가와 제조평가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 단독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설계단계의 모듈인 B나 생산단계의 모듈인 C,D,E,F는 서로 조합되어야 한다.

### 3.3.3.1 EMC 지침

1996년1월1일부터 실행되고 있는 EMC 지침은 89/336/EEC, 92/31/EEC, 93/68/EEC등이 있으며, 모듈A 또는 모듈B+C를 적용한다. 이것은 장비 또는 시스템이 놓여있는 전자파 환경에서 그 어떤 것에 간

섭 받거나 주지 않고 제 기능을 만족하게 발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고 있다. 적용 범위는 EMC 지침의 제2조 "전자파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기기나 또는 그러한 장애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기에 적용" 여기서 '기기'란 전기/전자부품을 내장한 장비와 설비를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 장치"에서 정하고 있다.

EMC 지침에 따른 적합성을 평가에는 3가지 경로를 사용하고 있다.

- (1) Article 10.1: Self-declaration route. (조화된 표준이 적용 가능한 경우) ; 자기인증(DoC) 절차

제조자가 스스로 해당제품을 시험하여 관련규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적합선언서를 작성하고 적합증명마크(CE-Marking)를 제품에 부착하여 시장에 출시시키는 것이다. 이전의 제도는 시장감독에 비해서 적합성 평가에 큰 비중을 두었지만 R&TTE Directive는 적합성 평가를 제조자에게 맡기고 시장감독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 (2) Article 10.2: Competent body route. (조화된 표준이 적용 가능하지 않거나 일부 적용 가능한 경우) ; 기술구성문서(TCF; Technical Construction File) 절차

유럽전기기술표준위원회(CENELEC) 기술규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적용하는 인증절차이다. 따라서 제조자는 자체적으로 시험을 실시할 수 없으며, EU에서 인정하는 별도의 시험기관(Competent Authority)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또한, TCF절차를 이용하여 어떤 제품이 전기적, 회로적, 구조적 유사성을 지닌 다수의 파생모델을 가지는 경우 EU 인정시험기관에서 Group 인증을 받을 수 있다.

- (3) Article 10.5: Notified body route.(무선 송신기의 경우) ; 형식승인(TEC : EC Type Examination Certificate) 절차

무선송신기는 용도상 의도적으로 전파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기로서 각종 통신계통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U는 이와 같은 기기에 대해서는 제조자 자율인증 방식이 아닌 각 회원국에서 지정

한 기관(Notified Body)에서 직접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제조자는 Notified Body로부터 받은 형식승인 인증서에 의해 적합선언서를 작성한 후 해당제품에 CE-Marking을 부착, 출하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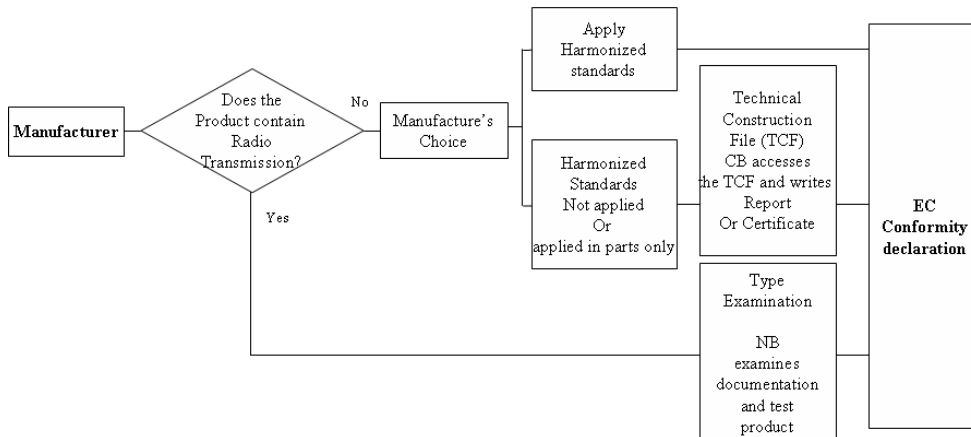


그림 3-5 EMC 인증절차

그림3-5는 EMC 인증절차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Notified Body (지정기관)이란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적합성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제3의 기관으로서 EEA국가내의 관련 국가당국에 의해 지정되는 기구이다. 그리고 Competent Body(소관기관)은 EMC 지침상의 TCF검사와 EMC Testing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정된 기관을 의미한다.

Technical Construction File(TCF)는 기술문서로 지침의 요구 사항에 대해 전기기기의 적합성을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심사에 관련되는 한 이 문서는 전기기기의 설계, 제조, 작동을 다루어야 한다. 제조자나 권한 대리인은 제품이 제조중단 후 적어도 10년 동안 EU지역 내에서 기술문서를 보관해야한다 만일 둘 다 EU지역 내에 없으면 이 의무는 EU 시장에 그 제품을 내놓는 사람에게 책임이 지워진다. 만일 기술 문서가



이용할 수 없거나 완전하지 않다면 부적합을 의미한다. TCF는 General Description. (제품에 대한 설명), Block Diagram & Circuit Diagram Parts List, 사용자 설명서, 중요부품에 대한 CE-mark 인증서 및 Spec. sheet 제조자 적합선언서와 Test Report로 구성되어 있다.

### 3.3.3.2 R&TTE 지침

이전의 형식승인 제도에서는, 각국 주관청이나 ETSI의 표준을 지명하여 승인 기준을 설정하였으나, 1999년 R&TTE 지침(이하 "인증지침"이라 함)에서의 인증지침에 따르면, 제조자는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요건을 따른다고 자신이 선언하면 된다. R&TTE 지침에 포함된 제품에 따른 적합성 평가 방법은 다음의 4가지로 나뉘어진다.

(1) **Internal Production Control(ANNEX II)** : 제조자가 인증지침의 필수요건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그 검토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기술 문서를 첨부한 후에 제품이 필수요건을 따른다고 선언하는 방식이다. 제조자는 EU에서 정한 표준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이는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이 방법은 모뎀, 유선전화기 등 유선통신기기에 적용된다. 기술문서는 다음과 같다.

- General description of the equipment
- Design and manufacturing drawings
- Schemes of components, circuits, etc.
- List of standards applicable and/or description of the technical solutions adopted
- Results of calculations made, etc.
- Test reports

(2) **Internal Production Control + Specific Apparatus Test(ANNEX III)** : 위의 경우와 같이 제품에 대한 자체 판단에 추가해서, 특정 기기에 대해서 실험을 했다는 내용을 담은 기술 자료를

첨부하면서 제품이 필수요건을 따른다고 선언하는 방식이다. 이때, 제조자는 조화된 표준을 사용해야 하며, 그 표준에서 실험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된 기관이 설정한 절차에 따른 실험을 하여야 한다. ANNEX II에 필수적인 Radio test가 추가되는 것으로 DECT,GSM과 같이 통합화된 표준이 있는 무선기기에 적용된다.

- (3) **Technical Construction File Route(ANNEX IV)** : 위의 Internal Production Control의 방식대로 제조자 자신이 적합함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정된 기관이 검토하고, 의견을 주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 제조자가 기술 자료를 제출하며 이 방식을 TCF 방식이라고 한다. 지정된 기관은 4주내에 의견을 발부하여야 하며,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제조사는 제품을 유통시킬 수 있다. 무선통신기기의 경우에는 시행한 실험 절차 및 방식도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정된 기관은 의견만을 발부할 뿐이며, 제품의 유통을 막을 권한은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에는 제조자가 제품의 적합성을 책임지는 방식이다.

Notified Body에서 인정하는 TCF는 10년간 보관되어야 한다. 통합화 및 표준화 되지 않아서 주파수가 국가별로 다르거나 사용하지 않는 국구가 있는 무선기기 즉, PMR, SRD, 아날로그 코드리스폰 등의 무선기기에 적용된다. TCF는 다음과 같다.

- Declaration of Conformity(제조사에서 작성 및 서명)
- Certification of Conformity / Export Option(NB에서 발행)
- Test Reports(Accredited Test Lab. 및 제조자 자체 발행)
- Safety/Health
- EMC
- RF/Telecom.
- Technical Documentation

- (4) **Full Quality Assurance(ANNEX V)** : 제조자가 지정기관에 의해

서 심사를 받고, 회원국 주관청의 감독을 받는 품질보증 체계를 운영하면서 제품이 인증지침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선언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설계, 제조, 시험등 전반에 걸친 QA가 Notified Body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인증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Application Form
- User Manual
- General Procuction Description(thpe, Model, brand, HS/SW version, product variants, intended purpose, special purpose)

표3-4는 인증대상기기에 대한 적합성 평가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표 3-4 인증대상기기에 대한 적합성 평가 방법

인증대상기기	ANNEX II	ANNEX III	ANNEX IV	ANNEX IV
유선단말기기	■		■	■
무선수신장치	■	■	■	■
조화표준화된 무선장비		■	■	■
조화표준화 되지 않은 무선장비			■	■
마킹	CE	CE +(NB No.)	CE +(NB No.) +Equip. ID.	CE

### 3.3.4 시험·인증체계

그림3-6은 유럽의 기술기준 시험·인증체계를 나타내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기술기준 시험·인증정책을 수립하며, 유럽의 지정기관 업무를 수행한다. 인정기관인 MSA(Member State Administration)는 각 CEC 회원국의 관계 당국으로 시험·인증기관을 인정하고, 인정한 시험·인증기관을 CEC에 신고한다. 시험·인증기관은 각국별 및 분야별로 시험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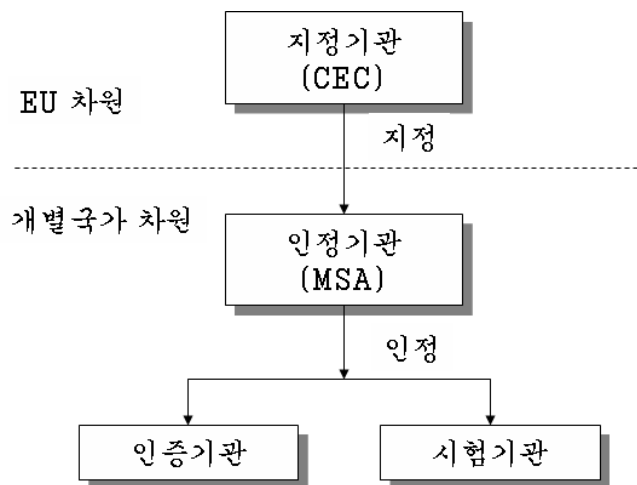


그림 3-6 유럽의 기술기준 시험·인증체계

## 제 3.4 절 일본

### 3.4.1 관련 법규

정보통신 시험·인증에 있어서 강제표준인 기술기준 분야에 대한 시험·인증 관련 법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 3.4.2 시험·인증제도

일본은 정보처리기기(ITE)에서 발생하는 불요전자파에 대한 자주적인 규제조치를 취하기 위해 우정성의 협조로 일본 내 4개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1985년 12월에 VCCI(Voluntary Control Council for

Interference)를 설립하였다.

일본에서 정보처리기기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법률적으로는 VCCI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VCCI는 VCCI에서 정한 규격을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VCCI의 인증은 OEM 및 소비자들의 인식도가 높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VCCI 인증은 승인제도가 아닌 등록제도이며, 초기 신청 시에는 반드시 업체 등록을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제품 등록은 VCCI에 등록되어 있는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가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며, VCCI로부터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문서를 접수한 다음부터 판매가 가능하다. VCCI에 등록한 제조자는 제품 및 카탈로그, 사용 설명서 등에 VCCI가 지정한 기술형식에 따라 제1종 정보처리장치(Class A)에는 라벨을, 제2종 정보장치(Class B)에는 마크 등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 3.4.3 인증절차

- (1) 신청인은 제품 및 제품 사양 등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여 VCCI 등록 시험소에 시험신청 한다.
- (2) 만약 신청인이 VCCI 등록 업체가 아니면 VCCI에 등록한다.
- (3) 불합격 시 불합격 내용을 수정하고, 시험소에 재시험 신청을 한다.
- (4) 시험 합격 후 VCCI에 시험과 관련된 레포트와 신청서를 VCCI에 접수한다
- (5) 최종등록 완결문서 수령(우편 또는 팩스)한다.

### 3.4.4 시험 · 인증 체계

그림 3-7은 일본의 시험·인증 체계이다. 우정성은 지정기관 및 인정기관 업무를 수행하며, 지정한 전기통신 단말기기 심사협회(JATE; Japan Approvals Institute for Telecommunications Equipment)에 의해 시험제도 및 인증제도가 운영된다. 또한 JATE는 시험 · 인증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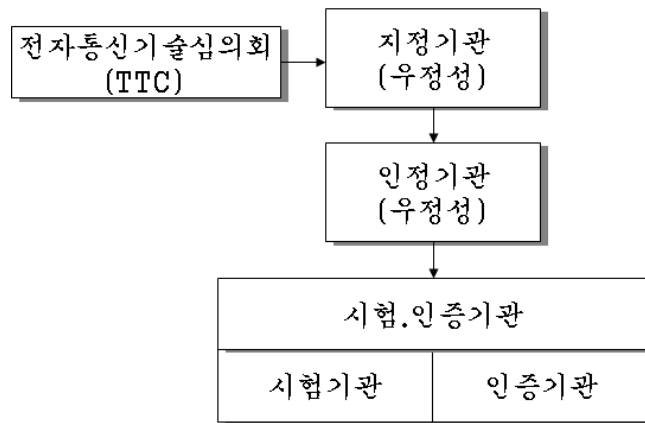


그림 3-7 일본의 기술기준 시험·인증체계

## 제 4 장 국내 정보통신기기 시험·인증제도

### 제 4.1 절 개요

국가는 국민의 안전, 보건 및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해당 제품이 준수해야 할 기술명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 준수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통신기기 제품의 경우 강제로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통신기기 기술기준이라 하며, 이의 준수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을 통신기기 인증제도라 한다. 국내 유·무선 통신기기 관련 인증제도로는 형식승인,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전자파 적합등록으로 구분된다.

유선통신기기의 경우 인명이나 통신망 보호를 위해 형식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무선통신기기의 경우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다른 통신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기에서 발생하는 불요 전자파에 의한 통신 장애 및 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산업 재해유발을 예방하고 선진국의 보호무역 주의에 적극 대처함으로서 국내 전자 환경 보호 및 국내 제품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자파 적합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의 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 관련 법규에 대하여 표 4-1에 나타내었다.

표 4-1 국내 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 및 관련 법규

구 분	형식승인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전자파 적합등록
관련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기통신기본법</li> <li>동법시행령</li> <li>동법시행규칙</li> <li>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li> <li>각종 고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파법</li> <li>전파법시행령</li> <li>무선설비규칙</li> <li>무선설비형식검정</li> <li>형식등록규칙</li> <li>각종 고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파법</li> <li>전파법시행령</li> <li>전자파적합등록 규칙</li> <li>각종 고시</li> </ul>
인증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파연구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파연구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파연구소</li> </ul>
대상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기통신기자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선기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파장해기기 및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li> </ul>
적용 기술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말장치 기술기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형식검정합격기준</li> <li>형식등록기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파장해기준</li> <li>전자파보호기준</li> </ul>

## 제 4.2 절 인증제도

### 4.2.1 형식승인

형식승인제도는 전기통신망 접속이 자유화된 단말기기 중에서 이용자가 안심하고 단말기기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형식승인 대상인 신청기자재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 4.2.1.1 관련법규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전기통신 기본법 제33조
- 전기통신 기본법 시행령
- 전기통신 기본법 시행규칙
-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정보통신기기 인증을 위한 세부지침

#### 4.2.1.2 인증대상기기

형식승인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형식승인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기자재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수입하는 기자재도 포함되며, 형식승인 대상 기자재는 전기통신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다.

- 기간통신망의 분계점에 유선으로 직접 접속하여 사용하는 기자재
- 기간통신망에 직접 접속되지 아니하는 기자재로서 기간통신망, 기간통신망 운용자 또는 기간통신망 이용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기자재
- 종합유선방송전송망의 분계점에 직접 접속하여 사용 할 수 있는 기자재

#### 4.2.2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다른 통신 이용자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무선기기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무선기기가 인명에 직접 관련되는지 여부에 따라 “형식검정”과 “형식등록”제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인명과 직접 관련되는 주요 무선기기의 경우는 형식검정 대상으로, 그리고 인명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으나 중요한 무선기기의 경우 형식등록 제도로 구분하고 있다.

##### 4.2.2.1 관련법규

- 전파법 제46조
- 전파법 시행령
-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 정보통신기기인증을 위한 세부지침
- 전파법시행규칙
- 무선설비규칙

#### 4.2.2.2 인증대상기기

무선기기 중 인명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형식검정대상 무선기기와 형식등록 대상 무선기기로 구분되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형식검정 대상기기

- 선박에 설치하는 경보자동수신기
- 선박에 비치하는 구명정용 휴대무선전신기기
- 선박국용 무선방위측정기
-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항공기국에 설치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 경보자동전화장치
-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 28메가헬즈 이하의 주파수대에서 단측파대 전파를 사용하는 단일 통신로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로서 해상이동업무 또는 항공이동업무에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 27메가헬즈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선박국용 무선전화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
-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헤행을 위한 레이더 및 그에 부가하여 설치하는 자동레이더푸팅 장치
- F3E 및 G3E 전파를 사용하는 선박국용양방향무선전화장치
-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
-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기
-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호출장치
- 디지털선택호출전용수신기
- 네비텍스수신기
- 수색구조용 레이더트랜스폰더의 기기
-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기기 등

## 나. 형식등록 대상기기

- 무선설비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택호출장치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
- 무선표출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28메가헬즈 이하의 주파수대에서 단측파대 전파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해상이동업무 또는 항공이동업무용기기 제외)
- 기상원조국에 사용하는 라디오존데 및 라디오로봇트의 기기
- 라디오부이의 기기
- F3E 및 G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선박국용 양방향 무선전화 장치 제외)
- 개설허가를 받아야 하는 고주파이용설비 중 의료용 설비의 기기
-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 기기
- 발신전용휴대무선전화장치
- 1,800메가헬즈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이동가입무선전화 장치의 기기 (개인휴대 통신용 무선설비)
- 900메가헬즈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디지털방식의 코드없는 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발신전용휴대무선전화장치)
- 900메가헬즈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데이터 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주파수공용무선전화장치
- 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미약전파 사용 무선설비 기기
-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위성휴대통신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그러나 이러한 기자재 중 시험·개발을 위해 시험 제작 또는 수입하는 경우나 수출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경우, 외국에서 제작 또는 수입된 무선설비 기기로서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을 받지 아니하기로 국가 간 상호 인정한 경우에는 형식검정이나 형식등록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식검정의 경우 시험과 인증은 오직 전파연구소에서만 수행하여야 하나 형식등록의 경우에는 인증 업무는 전파연구소에서 수행하나 해당 기술기준 시험은 전파연구소를 포함한 지정시험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형식검정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은 전파연구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형식등록의 경우에는 전파연구소를 포함한 지정시험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4.2.3 전자파 적합등록

정보통신부에서 제정한 전자파 적합등록은 전파법 제 57조에 근거하며 전기, 전자기기의 사용 급증으로 이들 기기에서 발생하는 불요 전자파에 의한 통신 장애 및 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산업 재해유발을 예방하고 선진국의 보호무역 주의에 적극 대처함으로서 국내 전파 환경 보호 및 국내 제품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 4.2.3.1 관련 법규

- 전파법 제57조
- 전파법 시행령
- 정보통신 인증규칙
- 정보통신 인증을 위한 세부지침
- 전파법 시행규칙

#### 4.2.3.2 대상기기

데이터 및 통신메세지의 입력·출력·저장·검색·전송 또는 제어 등의

주요기능과 정보전송용으로 작동되는 1개 이상의 터미널포트를 갖춘 기기로서 600볼트 이하의 공급전압을 가진 기기 중 무선설비를 제외한 기기로서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터미널 포트가 있는 컴퓨터 내장 구성품 및 유선통신단말기기류 그리고 컴퓨터와 컴퓨터의 내부 구성품, 컴퓨터의 주변기기가 전자파적합등록의 대상이 되며 형식승인 대상 전기통신기자재(유선통신 단말기기)중 컴퓨터와 연결될 수 있는 포트를 가진 기기나 그 자체로 정보기기에 해당되는 팩시밀리와 같은 기기가 전자파적합등록의 대상이다.

그러나 형식승인 대상인 정보기기의 경우 전자파 적합등록에 관한 별도의 인증은 하지 않고 형식승인 시 일괄 처리하므로 형식승인 신청 시 전자파적합에 관한 시험성적서만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 제 4.3 절 시험 · 인증체계

그림4-1은 국내 기술기준 시험 · 인증체계를 나타내며, 전파연구소가 지정기관, 인증기관, 시험기관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독립된 인정기관 및 인증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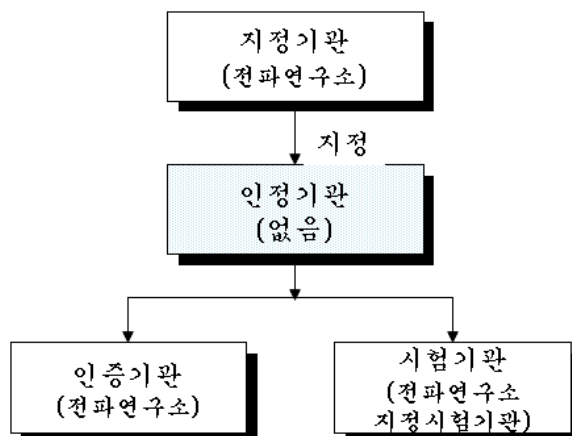


그림 4-1 국내의 기술기준 시험 · 인증체계

지정시험기관이란 정보통신기기의 인증을 위해 필요한 기술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시험하는 기관으로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2 와 전파법 제46조 및 제57조 에 명시된 근거에 의해 인증기관인 전파연구소로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아 시험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을 말한다.

시험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은 정보통신부령인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과 이에 대한 운영 지침으로 전파연구소에서 고시한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세부운영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다.

시험기관 지정을 위한 요건은 상기 규칙 등에 언급되어 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 규격인 ISO/IEC 17025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만족한다면 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내의 지정시험기관은 34기관에 114 시험장(유선 6, 무선 16, EMI 31, EMS 30, 안전 23, SAR 8)이 있다.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파연구소 또는 지정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인증대상별로 인증시험을 받아야하는데 형식승인의 경우 전기통신시험 및 전기안전시험을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전자파장해시험 및 전자파내성시험을 실시하고, 형식검정/형식등록은 무선기기시험과 전자파흡수율시험을 실시하고, 전자파적합등록의 경우 전자파장해시험과 전자파내성시험을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시험 성적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인 전파연구소에 제출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 제 5 장 정보통신기기의 사후관리

### 제 5.1 절 국내

사후관리는 인증기기에 대한 사후관리와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로 구분된다. 인증기기의 사후관리는 해당 기기가 과연 적합하게 인증을 받았는지, 인증 후 지속적으로 인증기준에 부합한지, 또 인증표시는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역시 해당 시험기관이 지정요건에 맞는 시험능력과 신뢰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검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 5.1.1 사후관리의 목적

사후관리는 형식승인, 형식검정, 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을 얻어 추가로 제작 또는 수입하는 정보통신기기를 전파법 및 전기통신기본법령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제작 유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권익보호, 전파질서 확립 및 전기통신망의 위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5.1.2 사후관리 방법

##### 가. 조사·시험

전기통신기본법 제36조 제2항 및 전파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기가 인증규칙(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 전파법 제45조 및 제57조)을 위반한 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다.

-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제10조와 전파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관계공무원은 인증기기의 제작 또는 유통과정에서 그 기기를 조사하거나 시험할 수 있다.
- 전파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해 조사·시험업무 수행 시 관계공무원은 별도의 증표 또는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조사·시험을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전기통신기본법 제53조제1항3호와 전파법 제8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해 각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나. 사후관리 조치

- 1)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기본법 제36조 제2항과 전파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험 결과 형식승인 규정(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과 형식검정·형식등록 규정(전파법45조) 그리고 전자파적합등록의 규정(전파법 제57조)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전기통신기본법 제36조제3항과 전파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사후관리 처분대상 : 모든 인증 대상기기의 시설자, 소유자, 제조자, 유통업자(판매·진열), 물류업자(보관·운송) 등
  - 사후관리 조치기준 : 시정, 철거, 파기, 수거, 사용중지 등
- 2) 형식승인, 형식검정·형식등록과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기기가 각각 전기통신기본법 제35조, 전파법 제74조와 전파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제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록 취소, 생산중지 등의 필요한 사후관리 조치를 취한다.
  - 전기통신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 등의 요건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얻은 때
    2. 전기통신기자재가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3.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때
  - 전파법 제 74 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 등의 요건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때

2. 형식검정의 합격 또는 형식등록 후 생산된 기기가 형식검정 합격기준 또는 형식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3. 형식검정 합격표시 또는 형식등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때

■ 전파법 제 75 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 등의 요건

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파적합등록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 후 생산된 기기가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증표시(전자파적합등록표장)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인증표시를 허위로 한 경우

이 중에서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형식승인의 경우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5조의2와 형식검정·형식등록과 전자파적합등록의 경우는 전파법 제77조제3 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한편, 형식검정·형식등록 그리고 전자파적합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일로부터 6 개월의 범위 내에서 당해 기기에 대한 형식검정·형식등록 그리고 전자파적합등록을 할 수 없다.(전파법 시행규칙 제 75 조).

그러나 동 조치는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해 형식승인과 형식검정·형식등록 그리고 전자파적합등록 등의 인증 재신청 제한기간이 취소일로부터 5 개월 이내로 단축 시행되고 있다. 표 5-1 정보통신기기의 법규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표 5-1 정보통신기기의 법규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

위 반 내 용	해당법조항	행정처분기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얻은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통신기본법 제35조제1항제1호</li> <li>- 전파법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75조</li> </ul>	인증취소
정보통신기기가 당해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통신기본법 제35조제1항제2호</li> <li>- 전파법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75조</li> </ul>	1차 위반 : 시정명령 또는 생산·수입중지 및 수거명령 2차 위반 : 인증취소 및 파기·수거 명령
정보통신기기에 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통신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li> <li>- 전파법 제74조제1항제3호, 제75조</li> <li>-</li> </ul>	1차 위반 : 시정명령 2차 위반 : 인증취소 및 수거명령
정보통신기기에 인증표시를 허위로 한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통신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li> <li>- 전파법 제74조제1항제3호, 제75조</li> </ul>	1차 위반 : 시정명령 2차 위반 : 인증취소

## 다. 벌칙 기준

### (1)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벌금 규정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 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가 전기통신 설비를 설치한 자
- 자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반하여 이를 운용한 자
- 전기통신업무 그 밖의 중요한 통신 업무를 취급하게 하거나 당해 설비를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접속하도록 하는 명령을 위반한 자
- 사용 정지 명령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개조 또는 수리 명령에 위반한 자
-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전기통신기자재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 생산중지명령에 위반한 자
- 파기또는 수거명령에 위반한 자
- 전기통신설비의 제거명령에 위반한 자

### (2)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53조에 따라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규정에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가 전기통신 설비를 사용한 자
- 시험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지 아니한 자
- 조사·시험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 관리규정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설비를 관리한 자

### (3) 전파법에 따른 벌금 규정(I)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검사·조사 또는 시험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형식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형식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기 또는 전자파 적합 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운송 또는 보관한 자

### (4) 전파법에 따른 벌금 규정(II)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파법 제8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무선국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설하거나 이를 운용한 자
-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기기 또는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기기에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형식검정합격표시·형식등록표시 또는 전자파적합등록표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기기를 유통한 자

## 5.1.3 사후관리의 세부운영지침

### 가. 행정처분기준

전파법 시행규칙 제 32 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 처분기준은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 13 조제 1 항의 규정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얻을 경우 위반 시 인증취소가 된다.
- 정보통신기기가 당해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하고 2차 위반 시 생산·수입중지 및 수거명령을 한다.

- 정보통신기기에 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차 및 2차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하고 3차 위반 시는 생산 또는 수입중지 및 수거 명령을 한다.
- 정보통신기기에 인증표시를 허위로 한 경우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의 조치를 취하고 2차 위반 시는 생산 또는 수입중지 및 수거명령을 한다.

## 나. 사후관리 실시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제10조 규정에 근거하여 전파연구소장은 사후관리 대상기기를 정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 다. 사후관리를 위한 대상기기의 확보

사후관리를 위한 대상기기의 확보에 관하여 정보통신기기인증을 위한 세부운영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다.

- 유통 중인 기기는 현지에서 선정한 후 인증을 받은 자의 동의를 얻어 직접 반입 또는 유통현장에서 직접 구매한다. 이 때 대상기기의 반입수량은 3대 이하로 하며 기기 선정 및 반입에 필요한 시험대상기기 반입요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유통 대기 중인 기기는 인증을 받은 자의 동의를 얻어 보관 장소에서 선정하여 반입 한다

## 라. 반입 또는 구매한 기기의 처리

- 규정에 의하여 반입 또는 구매한 정보통신기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 무상으로 반입한 정보통신기기는 시험결과 통보 시 반환한다.
  - － 구매한 정보통신기기는 “체신관서 물품관리세칙”에 따라 처리한다.

## 마. 사후관리 결과의 통보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1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사후관리의 결과 인증에 관한 사항에 부적합한 정보통신기기에 대하여 시정 명령 등을 명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 및 기간을 명기하여야 한다.

### 5.1.4 사후관리 실적

2004년도 사후관리 실적은 표5-2와 같으며, 이는 638개의 모델 중 14.3%인 91개 모델에서 부적합이 발견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5-2 2004년도 사후관리 실적

구분	수거수량	적합	부적합	부적합률(%)
형식승인	195	165	30	15.4
형식검정	5	5	0	0
형식등록	223	178	45	19.7
전자파적합등록	215	199	16	7
계	638	547	91	14.3

그림5-1은 부적합 사유를 설명하고 있는 그림5-1을 살펴보면 기술기준 위반이 74건으로 81.3%를 차지하고, 17건(18.7%)는 인증제도의 인식 부족에 따른 변경신고 규정 위반으로 나타났다.

그림5-2는 부적합기기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부적합기기의 행정처리는 총 91건 중 인증취소 및 파기·수거명령 3건, 생산·수입중지 및 수거명령 46건 및 시정명령 42건의 행정 처분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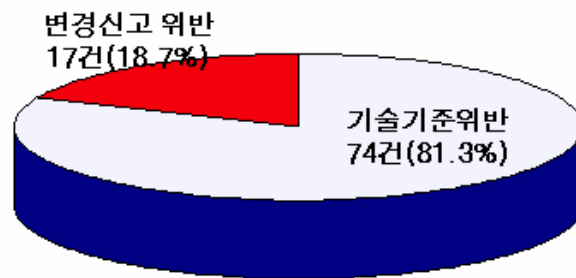


그림 5-1 부적합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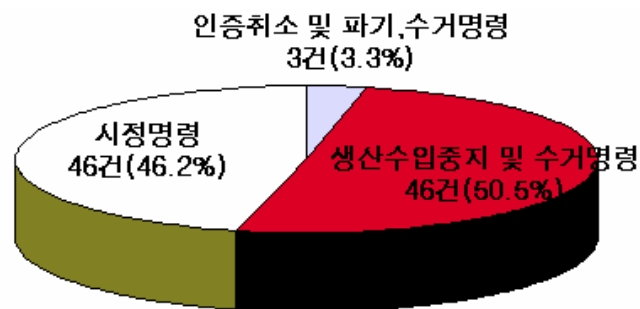


그림 5-2 행정처분 내용

특히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경우는 구내전송증폭기(25건 중 12건), 자동차 시동용 특정 소 출력기기(36건 중 15건), 수입산 전화기 (27건 중 8건), 미약전파를 사용하는 완구용 조정기(35건 중 10건), PDP 모니터(7건 중 3건)등으로써 주요부품 및 회로변경등에 의한 부적합이 다수 발생되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된다.

## 제 5.2 절 독일

### 5.2.1 연방 네트워크 청

최소한 통신 및 우편 관련 시장에 효율적 경쟁체제를 이루기 위해 일정분야에 특정된 법령의 제정과 이것을 집행할 기관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1998년 1월 통신·우편 부문 규제기관으로 연방 경제 노동부 산하에 통신우편 규제국(RegTP:Regulatory Authority for Telecommunications and Posts)이 설립하게 되었다. 이 규제국은 1996년 8월1일에 개정된 통신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통신 및 우편관련시장의 독점을 금지시키는 것을 주요 과제로 하고 있었다.

2005년 7월13일에 독일의 새로운 에너지법이 효력이 발효됨에 따라, 통신우편규제국은 기존의 RegTP가 통신과 우편관련 규제 업무에서 전기, 가스, 철도관련 규제업무를 포함하는 연방 네트워크 청(FNA:Federal Network Agency)으로 개편되었다. 이 새로 개편된 기관은 본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연방 경제 노동부 산하에 있으며 가스와 전기산업과 통신 및 우편 서비스에 관련한 종전의 권한 외에 2006년 1월1일 이후부터 철도 기간산업의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FNA는 전기, 가스, 철도 기간산업과 우정·통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유화 및 규제 해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통신과 에너지는 아주 다른 분야이며 전자는 완전히 자유화되어 성공적인 경쟁체제가 되었지만, 후자는 이를 위한 과정을 진행 하고 있다. 이러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FNA는 등급화된 경제 체제를 할 수 있는 권한 뿐 만 아니라 정보의 취득과 조사 권한을 포함하는 효과적인 절차와 기구를 갖고 있다. 전기, 가스, 통신 및 우편 분야에 있어서 FNA의 결정은 심통신법, 우정법과 에너지법에 근거를 두고 판실(Ruling Chamber)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통신 및 우편 업무에 관한 FNA는 종전 RegTP의 권한 및 임무를 그대로 갖고 있다. 따라서 FNA의 결정에 대한 투명성과 독립성은 심판실의 심판절차에 의해 보장된다. 심판실은 법령계통상 의장과 두 명의 보좌관으로 구성된 심판 기관이다. 심판절차는 직접 관련된 회사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며, 개인 또는 관련 단체는 이 절차에 참석하도록 요청받아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합당한 법적절차에 기본을 두고 있으며, 적법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된다. FNA의 법적행위와 관련하여 내려진 결정은 독립적이기 때문에 감독당국인 연방경제노동부에 의해 무효화되지 않는다.

그림5-3은 FNA의 조직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표5-3은 그림5-3의 항목의 설명이다. 그림5-4는 FNA의 조직도 중에서 사후관리와 관련 있는 조직만을 설명한 그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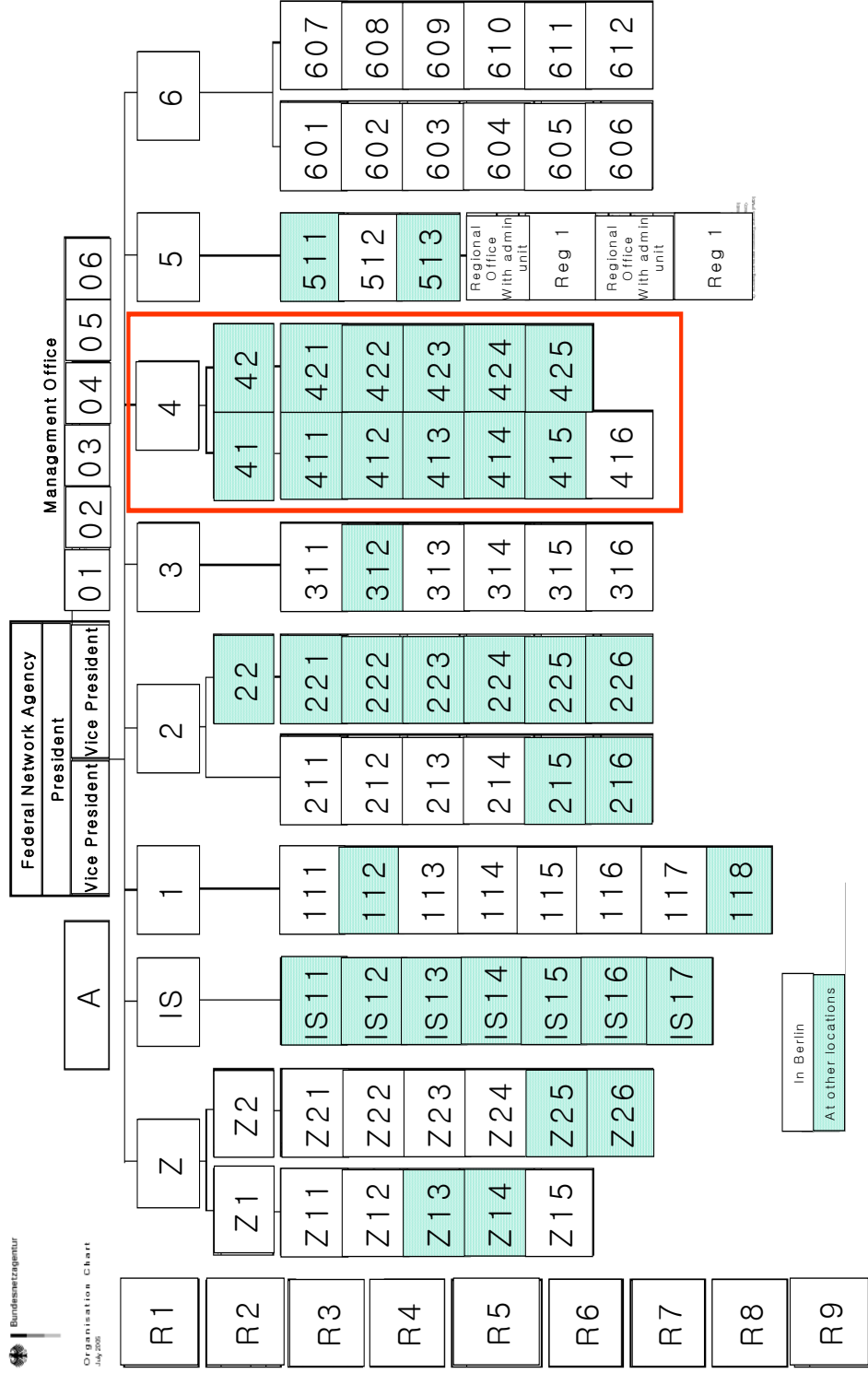


그림 5-3 FNA 조직도

표 5-3 FNA 조직의 업무 영역

R1	<b>Ruling Chamber 1</b> President's Chamber Licensing and Universal Service in Telecommunications and Post Radio Spectrum Resources
R2	<b>Ruling Chamber 2</b> Retail Markets Fixed Line Networks Responsible for markets: Assessment Bodies 1 - 6, 19, 20, 27 *
R3	<b>Ruling Chamber 3</b> Utilisation Concepts, Wholesale and Retail Markets Broadband Access Mobile Responsible for markets: 7, 12 - 18, 21 - 27 *
R4	<b>Ruling Chamber 4</b> Wholesale Markets Fixed Line Networks Local Loop Responsible for markets: 8 - 11, 27 *
R5	<b>Ruling Chamber 5</b> Rates Regulation and Special Control of Anti-Competitive Practices Postal Markets
R6	<b>Ruling Chamber 6</b> Regulation, Electricity Grids
R7	<b>Ruling Chamber 7</b> Regulation, Gas Networks
R8	<b>Ruling Chamber 8</b> Use of System Charges Electricity
R9	<b>Ruling Chamber 9</b> Use of System Charges Gas

표 5-3 (계속)

Management Office	A	General Staff Council Staff Council General Spokesperson for Disabled Persons Spokesperson for Disabled Persons 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er Data Protection Commissioner
		01 Office of the President and Vice Presidents, Procedural Issues
		02 Litigation/Legal Disputes
		03 International Coordination
		04 Press Office
		05 Ruling Chambers Office
	Z	06 Advisory Council Office
		Central Matters
		IS Information Technology and Security
		1 Economic Aspects of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
		2 Legal Aspects of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 Frequency Regulation
		3 Postal Regulation
	4	Technical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
		5 Regional Offices
		6 Energy Regu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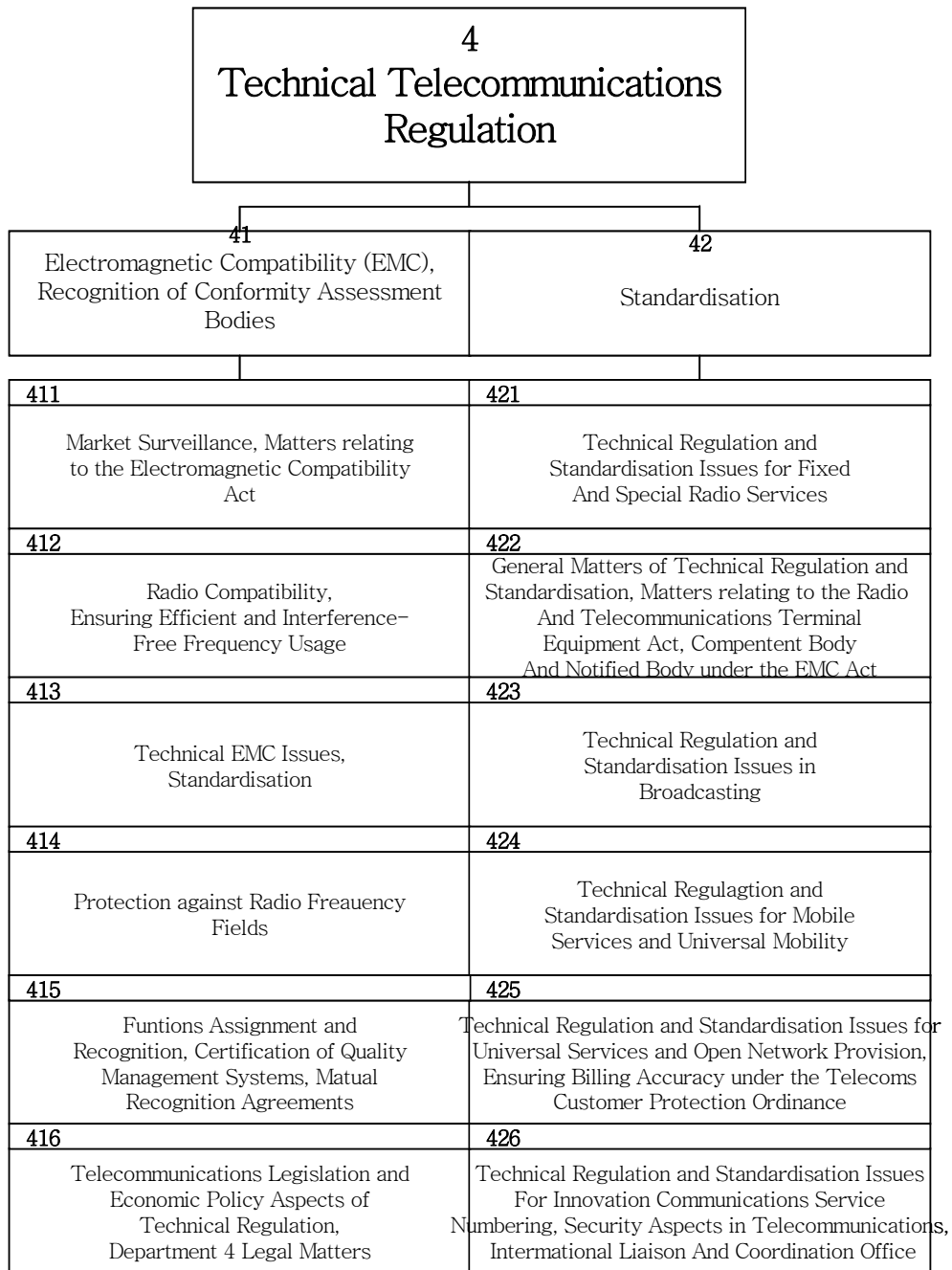


그림 5-4 Technical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4)의 조직도

### 5.2.2 사후관리

CE 마킹을 한 제품은 아무런 제약 없이 EU 회원국으로 통관되며, 통관된 제품은 유럽시장에서 아무런 차별 없이 유통될 수 있다. 각 국의 세관에서는 CE 마킹에 대한 확인과 적합성 선언서를 접수하여 통관시킨다. 단 통관된 제품인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관련 이해 관계자(소비자, 경쟁업체 및 자국 내 검사기관 등)의 이의 신청에 따라 기술 문서의 제출 요구와 더불어 샘플 검사 등의 사후관리를 받는다.

CE 마킹은 강제규격이지만, 회원국 정부의 CE 마킹 주관기관의 사전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만 시판할 수 있는 사전 검사제도가 아니라 사후관리를 받는 제도로서, 주관기관은 자발적으로 또는 이해관계자의 신고 또는 문제 발생 시 시중 유통제품을 수거하여 규격 적합성 관련 서류 검사와 필요 시 제품의 안전 검사를 실시한다.

주관기관은 문제대상의 제품을 수거하여 지침이 명시하고 있는 필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서류검사는 기술설명서, 사용설명서와 기타 검사성적서의 내용을 검사하는 것으로 서류검사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수거한 샘플에 대해 적합성 검사를 한다.

FNA는 독일의 정보통신 장비와 관련하여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기구를 갖는다. 사후관리는 89/336/EEC의 EMC 지침을 바탕으로 1999년 9월 18일에 발효된 EMVG(기기의 전자파 적합성에 관한 법률)와 2001년 1월31에 발효된 99/5/EC의 R&TTE 지침에 근거한 FTEG(무선통신 및 정보통신 단말기에 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FNA의 사후관리 대상기기는 다음과 같다.

- Low voltage equipment (73/23/EEC, amendment 93/68/EEC)
- Toys (88/378/EEC, amendment 93/68/EEC)
- Machinery (98/37/EC, amendment 98/79/EC)

- Medical devices (93/42/EEC, amendment 98/79/EC) and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98/79/EC)
-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89/686/EEC, amendments 93/68/EEC, 93/95/EEC and 96/58/EC)
- Gas appliances (90/396/EEC, amendment 93/68/EEC)
- Hot water boilers (92/42/EEC, amendment 93/68/EEC)
- Recreational craft (94/25/EC)
- Lifts (95/16/EC)
- Refrigeration appliances (96/57/EC)
- Pressure equipment (97/23/EC)

예를 들어 컴퓨터 제품에 EC 지침을 적용하는 경우, 컴퓨터는 전기 전자 장비이기 때문에 EMC 지침의 적용 받는 반면, 그것의 부속품인 모뎀, 무선 마우스 등은 R&TTE 지침을 적용한다. 그리고 컴퓨터의 전원이 50-1000V사이의 교류전원과 75-1500V사이의 직류 전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저전압 지침에 적용을 받는다.

### 5.2.3 사후 관리 절차

FNA의 사후관리 담당 부서는 기기의 전자파 적합성에 관한 법률(EMVG)과 무선통신 및 정보통신 단말기에 대한 법률(FTEG)에 근거하여 사후관리 조치를 진행한다.

#### (1) Section 411

사후관리와 EMC 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10명의 직원이 있고, 그 중 4명은 중앙 통제 국에 속해 있다. 이 부서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 EMC와 R&TTE 법에 따라 사후 관리 절차를 시행한다.
- 사후 관리를 하기 위한 절차와 지침을 기획한다.
- EC 시장 진입과 사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다른 기관의 담

당자와 접촉을 한다.

- EMC 지침 제9조와 R&TTE 지침에 따른 세이프 가드 조항을 이행한다.

## (2) 중앙 통제소(Leer 소재)

- 지역 사무소 운영을 위한 연간 시험 계획을 기획한다.
- 시험할 제품에 대한 적합성 시험기관을 지정한다.
- 통계를 수합하여 분석한다.

## (3) 지역 사무소

제한된 측정만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소를 갖춘 26개의 지역 사무소는 3에서 5명으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86명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 EC 적합성 선언이 적절한 지를 조사한다.
- 시리즈와 주문자 생산 제품에 대한 기술적인 시험을 실시한다.
- 검사에서 부적합성으로 판명되는 경우 판매 금지나 벌금 같은 일련의 조치를 취한다.

부적합성이 검출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제품을 개선을 요구할지 또는 EC 적합성 선언을 수정하도록 할지에 관하여 청문을 실시한다.
- 필요하다면, EMVG 제8조에 의거하여 판매 금지를 시킬 수 있다.
- 경위서의 작성을 거절할 경우, EMVG 제9조에 따라 강제적인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법을 위반하면 포괄적인 조치로 EMVG 제12조와 FTEG 제17조에 따라 약식 재판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반 경고에서부터 50,000유로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측정 결과에 따라, EMVG 제10조제1항과 FTEG 제16조의 비용조항을 근거로 50유로에서 21,000유로 범위 내에서 벌금



을 부과할 수 있다.

- 또한 EMC 제9조와 R&TTE 지침에 따라 세이프 가드 절차를 실행하기 위해 Section 411으로 하여금 판매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사무소에서는 표준 측정 항목으로 장해 전압과 전력의 세기를 측정하고 그 외에도 제품의 특정 부분의 측정항목을 전문적으로 측정한다.

#### (4) 인정 시험소

인정 시험소는 베를린 근교에 위치에 있으며 13명이 근무하고 있다. 시리즈 제품과 주문자 제품에 대한 EMC와 R&TTE 분야의 표준 측정항목의 기술적인 시험을 실시한다. 그리고 지역 시험소 중 한곳에서 특정 부분의 측정항목 측정한 후에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 표준 측정항목을 측정한다. 현재 8개의 장소에 5개의 대규모 시험소가 있다.

#### 5.2.4 현장조사

- 현장 조사는 공급자, 제조자와 수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현장 조사에 앞서, 상담을 통하여 정보 자료를 제출 받고, 현장 조사와 측정 제품의 수거는 통보 없이 수행한다.
- 제공된 제품에 대하여 EMC와 R&TTE의 적합성을 조사한다.
- EMC와 R&TTE 지침의 요구 조건을 따르지 않는 제품을 찾아내서, 우선 판매 금지를 시킨다.
- 필요하다면, 명백하게 잘못 표시가 부착된 제품에 대하여 구두로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한다.
- 올바르게 않게 표시가 부착된 상품 뿐 만 아니라 측정 조사를 위해 EMC와 R&TTE 적합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제품에 관한 정보를 파악한다.

- 측정과 같은 기술적인 조사를 하기 위하여 상품을 수집할 수 있다.

#### 5.2.4.1 대상 기기의 확보

사후관리 대상 기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조자와 대상기기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받는다. 제조자와 공급자와의 접촉을 통하여,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홍보를 하고 사후관리용으로 장비를 확보한다는 것을 제조자와 공급자에게 알린다. 그리고 장치형식, 시리얼 번호, 출시 담당자의 이름 등이 표시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시장으로부터 장비를 확보할 지역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동일한 공급자로부터의 표본 추출을 피한다. 공급자 대신에 제조자로부터 표본의 대상기기를 확보할 수도 있다. 대상기기의 확보는 EMC의 가능성이 있는 장비를 선택하고 다른 제품 보다 불량한 것으로 보이는 저가의 장비,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사후관리를 하기 위하여 전문 요원으로 구성된 그룹을 만들어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요원과 함께 사후 관리를 시행한다. 표5-4는 사후관리를 위한 현장조사와 대상기기의 확보 및 선정 방법을 설명한다.

표 5-4 현장조사와 대상기기의 확보 및 선정 방법

<p>현장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업자,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실시</li> <li>▪ 현장 조사 전에 상담을 통하여 제품에 대한 정보 자료를 입수</li> <li>▪ 현장 조사와 측정 제품의 수거는 통보 없이 수행</li> <li>▪ EMC와 R&amp;TTE 지침의 요구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우선 판매 금지</li> <li>▪ 명백하게 잘못 표시가 부착된 제품에 대하여 구두로 판매 금지 조치</li> <li>▪ 시험에 대한 기술적인 조사를 하기 위하여 상품을 수집할 수</li> </ul>
<p>대상기기의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와의 접촉을 통하여,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홍보를 하고 사후관리용으로 제품을 확보한다는 것을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에게 알린다. 그리고 제품형식, 시리얼 번호, 출시 담당자의 이름 등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li> <li>▪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시장으로부터 장비를 확보할 지역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동일한 공급자로부터의 표본 추출을 피한다. 유통업자 대신에 제조업자로부터 표본의 대상기기를 확보할 수도 있다.</li> </ul>

표 5-4 (계속)

대상기기의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MC의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선정</li> <li>▪ 다른 제품 보다 불량한 것으로 보이는 저가의 장비</li> <li>▪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li> <li>▪ 통상 2년마다 최소 1회 이상 독일 및 EU에 수입 또는 시판되는 제품을 임의로 선정</li> <li>▪ 전 년도에 경고 조치된 회사를 대상으로 선정</li> <li>▪ 경쟁사가 경쟁사의 취약 모델을 시험평가하여 불합격 시 FNA에 신고한 제품</li> <li>▪ 각 회사에 차기 년도에 시판될 제품별 모델을 접수 받아 몇 개의 대표모델을 선정</li> <li>▪ 소비자 불만 접수 또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제품</li> <li>▪ 소비자 단체의 요구가 있는 품목</li> <li>▪ 소비자 잡지에 게재된 EMC 규격을 만족하지 못한 제품.</li> </ul>
----------	--

#### 5.2.4.2 판정 등급별 조치

독일의 FNA는 1999년 이래 최초로 측정 불확도를 고려하여 적합성 판정을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 (1) 적합성

측정값이 표준값 이하일 때, 적합성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보호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한다. 따라서 EMC 법에 따른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 (2) A 등급

측정값이 표준값으로부터 측정 불확도의 0.5배까지 초과한 경우에 적합성으로 판정한다. 이 판정 결과의 내용은 시장에 서신으로

통보된다. 여기서 비공식적인 경고는 있지만, EMC 법에 따른 벌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 (3) B 등급

측정값이 표준값으로부터 측정 불확도의 0.5배에서 1.5배 사이의 값만큼 초과한 경우, B 등급의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이것은 보호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EMC 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며, 제품의 자유로운 유통에 대해 제재가 내려지지는 않지만, 시장에 출시된 제품이 전자파 적합성에 관한 요구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지정한 기간 내에 예방 및 시정조치를 하도록 요구된다.

### (4) C 등급

측정값이 표준값으로부터 측정 불확도의 1.5배를 초과한 경우에 C 등급으로 판정되며, 이 때 이 제품은 명백한 부적합으로 간주되어, EMC 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며 예방조치 뿐 만 아니라 시정조치가 내려지는 것 외에도 시장에서 유통이 금지된다.

그림5-5는 측정결과에 따른 4단계 판정 방법과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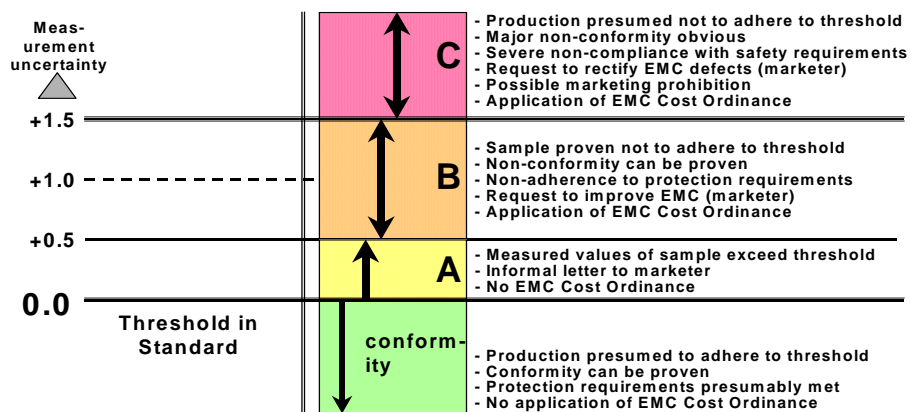


그림 5-5 3단계 판정 원칙

표5-5는 30가지의 중요 측정 항목의 측정 불확도에 대한 EMC 판정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EMC decision matrix for the assessment of non-adherence to threshold (issue 05a/99)						
No.	Phenomenon 01 - 16: eq. (exc. c. e.) 17 - 30: c. e. eq.	Measurement uncertainty	Stage A: Informal notification	Stage B: Improvement of EMC	Stage C: Marketing prohibition (marketer + supplier)	
1	Disturbance voltage	3.8 dB	0 + 1.9 dB, non-adh.	> 1.9 5.7 dB	> 5.7 dB	
2	Disturbance power	3.4 dB	0 + 1.7 dB	> 1.7 5.1 dB	> 5.1 dB	
3	Disturbance field strength	5.0 dB	0 + 2.5 dB	> 2.5 7.5 dB	> 7.5 dB	
4	Rad. disturbance power	2.0 dB	0 + 1.0 dB	> 1.0 3.0 dB	> 3.0 dB	
5	Rad. disturbance power	5.0 dB	0 + 2.5 dB	> 2.5 7.5 dB	> 7.5 dB	
6	Disturb. current (L/D 2m)	4.0 dB	0 + 2.0 dB	> 2.0 6.0 dB	> 6.0 dB	
7	Insertion loss	1.6 dB	0 + 0.8 dB	> 0.8 2.4 dB	> 2.4 dB	
8	Harmonics	5 %	0 + 2.5 %	> 2.5 7.5 %	> 7.5 %	
9	Flicker	1 %	0 + 0.5 %	> 0.5 1.5 %	> 1.5 %	
10	FSD	In sample	In the case of EMC parameters 10 - 16 stages A + B should not normally be assessed! However, application may be possible pending comments from the measurement laboratory (Kolbert)			Non-compliance
11	FMF	In sample				Non-compliance
12	Burst	In sample				Non-compliance
13	Surge	In sample				Non-compliance
14	Conducted disturbance	In sample				Non-compliance
15	Magnetic field	In sample				Non-compliance
16	Voltage dips	In sample				Non-compliance
17	Disturbance voltage (netw.)	3.8 dB	0 + 1.9 dB	> 1.9 5.7 dB	> 5.7 dB	
18	Disturbance voltage (ant.)	3.2 dB	0 + 1.6 dB	> 1.6 4.8 dB	> 4.8 dB	
19	Disturbance voltage (modul.)	2.0 dB	0 + 1.0 dB	> 1.0 3.0 dB	> 3.0 dB	
20	Disturbance power	3.0 dB	0 + 1.5 dB	> 1.5 4.5 dB	> 4.5 dB	
21	Disturbance field strength	5.0 dB	0 + 2.5 dB	> 2.5 7.5 dB	> 7.5 dB	
22	Harmonics	5 %	0 + 2.5 %	> 2.5 7.5 %	> 7.5 %	
23	Flicker	1 %	0 + 0.5 %	> 0.5 1.5 %	> 1.5 %	
24		Picture / sound	Picture / sound	Picture / sound	Picture / sound	
25	Antenna input picture/sound	3.0 / 2.2	0 + 1.5 dB / + 1.1 dB	> 1.5 - 4.5 dB / > 1.1 - 3.3 dB	> 4.5 dB / > 3.3 dB	
26	Conducted, netw./loudsp.	3.0 / 2.2	0 + 1.5 dB / + 1.1 dB	> 1.5 - 4.5 dB / > 1.1 - 3.3 dB	> 4.5 dB / > 3.3 dB	
27	Conducted, audio	3.0 / 2.2	0 + 1.5 dB / + 1.1 dB	> 1.5 - 4.5 dB / > 1.1 - 3.3 dB	> 4.5 dB / > 3.3 dB	
28	Current input antenna	4.0 / 3.0	0 + 2.0 dB / + 1.5 dB	> 2.0 - 6.0 dB / > 1.5 - 4.5 dB	> 6.0 dB / > 4.5 dB	
29	Insertion	4.0 / 3.0	0 + 2.0 dB / + 1.5 dB	> 2.0 - 6.0 dB / > 1.5 - 4.5 dB	> 6.0 dB / > 4.5 dB	
30	Screening loss	4.0 / 3.0	0 + 2.0 dB / + 1.5 dB	> 2.0 - 6.0 dB / > 1.5 - 4.5 dB	> 6.0 dB / > 4.5 dB	

❶ Threshold exceeded    ❷ Transmit and receiving equipm. only    ❸ Magnetic field in lighting luminaire    ❹ Lighting luminaires only    ❺ EN 55011 only  
 \* = Approval by 311 required for parameters 0 - 16 and 25 - 30 in stage C of the method!

### 5.2.4.3 사후관리 조치를 위한 절차

시리즈 제품이나 주문자 제품을 지역 사무소에서 표준측정 방법으로 방해 발사를 측정하고, 자체 측정방법으로 발사와 내성을 측정한다. 만일 표준측정 방법으로 가능한 모든 측정을 한 후 어떠한 결함도 검출 되지 않는다면, 제품을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자체측정 방법으로 발사와 내성을 측정한 후, A나 B 또는 C 등급으로 평가되면, 행정조치 및 벌칙의 부과를 검토한다. 또한 이 측정방법에 의해서 결함이 발견되고, 표준측정 방법에 의해서 평가된 결과가 C 등급이 아니라면, 시리즈나 주문자 제작 제품을 Kolberg 중앙 시험소에서 표준측정 방법으로 방해 발사와 내성 시험한 후 결과에 따라 제품을 시장에 복귀시키거나 행정조치 및 벌칙의 부과를 검토한다.

그림5-6은 위에서 설명한 사후관리 조치를 위한 절차도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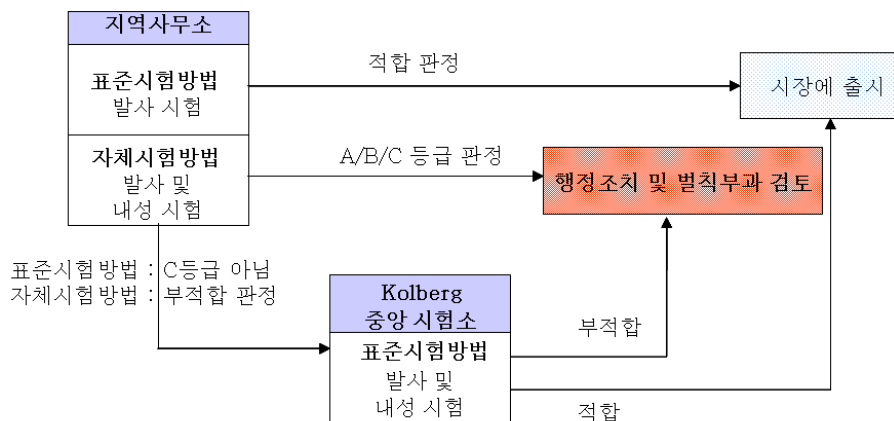


그림 5-6 사후관리 조치를 위한 절차도

### 5.2.5 사후 관리 조치

(1)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EMVG 벌칙규정에 따라 5십만 유로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CE 마크부착없이 유통, 판매한 자(제8조제2항)
- CE 마크장치의 결격사항 개선요구 불이행한 자(제8조제2,3항)
- CE마크로 오해소지가 있는 마크 부착한 자(제8조제5항)
- 공공에 해가되는 전자파 발생시킨 자(제8조제6항)
- 전자파 발생지에 대한 수사 거부한 자(제8조제8항)
- 장비의 정보제공에 협조하지 않은 자(제9조제1항)
- 규제국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에게 정보제공 의무 및 조치를 거부한 자(제9조제2항)
- 검사 조사 및 시험 거부, 방해자(제9조)
-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 및 전시, 운송, 보관한 자

(2)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EMVG 벌칙규정에 따라 5만유로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CE마크부착 원칙을 위반한 자(제12조1항1호)
- 다른 마크의 부착으로 CE마크의 시각성 및 명료성 훼손시킨 자(제12조1항3호)
- 장비 작동에 관한 데이터의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제12조1항4호)
- 표준화 되어 있는 송신기의 판매에 관한 절차 불이행한 자(제12조1항6호)

(3)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EMVG 벌칙규정에 따라 5천유로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인증서 및 기술문서의 보관기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제



12조1항2호)

- 장비 인도시 충분한 정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제12조1항5호)
- 장비전시 및 박람회의 장비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이행하지 않은 자(제12조1항7호)
- 구성품의 기술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그에 관한 기술문서의 보관기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제12조1항8호)

## 5.2.6 사후관리 실적

### 가. 파악되고 방문된 유통업체 및 제조업체 수

표5-6은 2004년도에 파악되고 방문된 유통업체 및 제조업체 수이다. 전체 100,538 개로 파악된 유통업체 및 제조업체 중에서 방문한 유통업체와 제조업체 수는 각각 2,833개와 825개 업체이고, 현장 조사와 측정한 건수는 9,289건이다. 그 중 독일 이외 국가의 제품 수는 3,163개 이다.

표 5-6 파악되고 방문된 유통업체 및 제조업체 수(2004년도)

전체 파악된 유통 및 제조업체 수	100,5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악된 독일 제조업체 수</li> <li>— 파악된 독일 제조업체 수</li> <li>— 파악된 EU 국가 제조업체 수</li> <li>• 파악된 전체 유통업체 수</li> </ul>	6,775 5,423 1,352 93,763
전체 방문 업체수	3,6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 제조업체 수</li> <li>• 방문 유통업체 수</li> </ul>	825(12.1%) 2,833(3.0%)

#### 나. EMC 지침과 R&TTE 지침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제품

표5-7은 2003년도와 비교한 2004년도의 사후 관리 활동실적을 요약하고 있다. 시험되고 조사된 제품의 개수는 9,289개이고, 이들 중 7,175개는 EMC 지침을 그리고 2,114개는 R&TTE 지침을 적용하였다. 시험되거나 조사된 제품의 18.04%가 R&TTE 지침의 적용을 받고 나머지 82%는 EMC 지침을 적용 받는 제품들이다. 표5-8과 표5-9는 각각 R&TTE 지침과 EMC 지침을 적용받는 제품군과 이에 속하는 제품의 예이다.

표 5-7 EMC 지침 및 R&TTE 지침에 따른 사후관리 실적

	2004년도		2003년도	
현장 조사와 측정 건수	9,289		13,108	
• EU 국가 제품	1,342			
• Non-EU 국가 제품	1,821			
• 독일 제품	6,126			
EMC 지침 적용 제품의 개수	7,175	82%	10,743	82%
R&TTE 지침 적용 제품의 개수	2,114	18%	2,365	18%
• Radio 장비	1,635	77%	1,342	57%
• 전화통신터미널 장비	269	13%	681	29%
• 종합 R&TTE 장비	210	10%	342	14%

표 5-8 R&TTE 제품군에 속하는 제품의 예

제품군	제품 예
Telecoms terminal equipment	Telephones (corded), answering machines, faxes, modems, PBXs, telecoms accessories, etc.
Radio equipment	CB radio equipment, remote control, receivers and transmitters for various radio communication services, etc.
Combined equipment	Telephones (cordless), mobiles, etc.

표 5-9 EMC지침 제품군에 속한 제품의 예

제품군	제품 예
Domestic appliance	Kitchen gadgets, kettles, fryers, grills, heaters, toys, pumps, etc.
Power tools	Drills, saws, sanders, garden tools, machine tools, etc.
Lighting equipment	Indoor/outdoor lighting, fairy lights, lighting accessories (eg transformers), etc.
IT and office equipment	Document shredders, photocopiers, computers (laptop/towers), IT components (e.g. input/output devices), etc.
Consumer electronics	Radios, TVs, video recorders, hi-fis, (active) loudspeakers, satellite receivers, musical instruments, etc.
Medical devices	Battery chargers, power supply units, compressors, radiation equipment, laboratory equipment, monitoring Equipment, display units, etc.
Miscellaneous	Electrical installation materials, electrical controls (heating, etc.), antenna installation material, alarm and Security systems, complex components, etc.

#### 다. 보호요건에 대한 적합성 시험

2004년에 1,305개의 시리즈 제품과 134개의 개별 제품을 EMC 지침에 따라 각각 1,049개와 122개 제품에 대하여 그리고 R&TTE 지침에 따라 각각 257개와 12개의 제품에 대하여 보호요건에 대한 적합성 시험을 시험하였다. 표5-10에서와 같이 시리즈 제품에서 447개(34%)의 제품이 부적합이고 개별제품 중에서는 23개(17%)가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표 5-10 보호요건에 대한 적합성 조사 결과

보호요건에 대한 적합성	2004			2003		
	제품 개수	부적합 개수	%	부적합 개수		%
시리즈 제품	1,305	447	34	1,250	379	30
• EMC 지침	1,049					
• R&TTE 지침	257					
개별 제품	134	23	17	226	47	21
• EMC 지침	122					
• R&TTE 지침	12					

#### 라. EMC 지침과 R&TTE 지침에 따른 사후관리 실적

표5-11과 표5-12는 2004년도의 EMC 지침과 R&TTE 지침을 적용받는 제품군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이다. EMC 지침을 적용하는 1,054개의 시리즈 제품과 123개의 개별제품가운데 부적합 제품의 수는 각각 370개와 20개로 전체 부적합율이 33%로 나타났다. 그들 중 조명장비에 대한 부적합률이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R&TTE 지침에 따라 257개의 시리즈 제품과 11개의

개별제품에 대한 부적합 제품의 수는 각각 77개와 3개로 전체 부적합율이 29.8%로 나타났다.

표 5-11 EMC 지침 제품군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제품군	시리즈 제품	개별 제품	부적합 시리즈	부적합 개별 제품	부적합 율(%) (2004년)	부적합 시리즈 제품(%) (2003년)
Domestic appliance	154	41	43	5	24.6	19
Power tools	188	0	37	0	19.6	22
Lighting equipment	222	4	110	0	48.6	48
IT and office equipment	219	61	75	14	31.7	25
Consumer electronics	188	3	76	0	39.7	17
Industrial equipment	40	6	16	1	36.9	58
Medical devices	1	1	0	0	0	0
Scientific equipment	4	2	1	0	16.6	33
Insulation materials	38	5	12	0	27.9	28
	1,054	123	370	20	33.1	

표 5-12 R&TTE 지침 제품군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제품군	시리즈 제품	개별 제품	부적합 시리즈	부적합 개별 제품	부적합 시리즈 제품(%) (2004년)	부적합 시리즈 제품(%) (2003년)
Telecoms Terminal Equip.	63	5	21	0	33	36
Radio equipment	157	6	51	3	32	41
Combined equipment	37	0	5	0	14	0
	257 (221)	11 (11)	77 (83)	3 (0)	79	77
괄호 안은 2003년도 실적임						

마. 3단계 평가에 의한 평가 결과

표5-13은 시리즈 제품에 EMC 지침과 R&TTE 지침을 적용하여 시험한 결과를 평가등급으로 분류해 놓은 것이다.

표 5-13 3단계 판정등급(2003년도)

평가 등급	시리즈 제품 수	EMC 지침	R&TTE 지침
적합성	56	56	0
A 등급	77	59	18
B 등급	86	72	14
C 등급	263	212	51

일단 C 등급의 부적합성이 한 개의 특성에 대해서 기록되기만 하면, 측정을 중지한다. 그러므로 제품들은 다른 특성에 대해서 역시 부적합성을 나타낼 수도 있다. 1,244개 형식이 EMC 요구조건에 대하여 시험되었으며, 그중 343개의 성식이 EMC 요구조건에 부적합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5-7은 이를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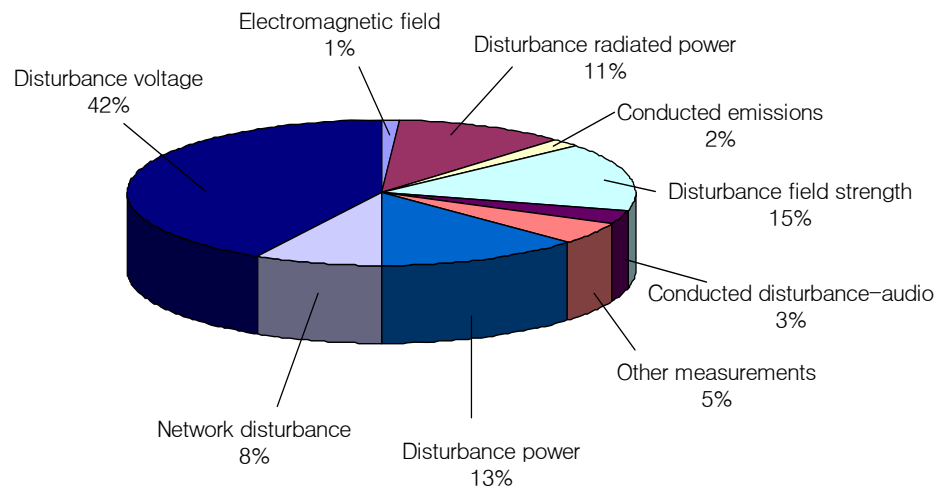


그림 5-7 EMC 지침에 따른 제품형식의 부적합성 평가 결과

R&TTE 지침에 대하여 실효 주파수와 관련하여 226개 형식의 제품을 조사한 결과 83개의 형식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5-8은 이들의 결과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림에서 그 밖의 측정은 주파수 안정도, 대역폭, 채널 간격, TPC, DFS 등이 해당된다. 모뎀, 스위치 박스, 무선 장비와 같은 안전성 측면과 관련하여 8개 형식의 제품이 시험되었다. 이들의 시험항목으로는 기계적인 강도, 전기강도, strain relief, 열과 접속 등이 있으며, 이 시험에서 어떠한 부적합성도 검출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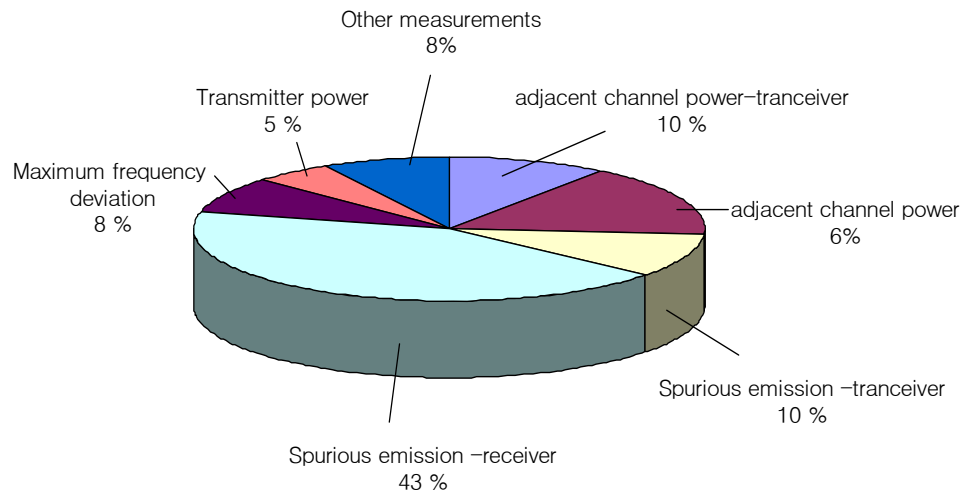


그림 5-8 R&TTE 지침에 따른 지침에 따른 제품형식의 부적합성  
평가 결과

#### 바. 사후관리 조치 내용

표5-14로부터 알 수 있듯이 EMC 지침에 따라 422개와 R&TTE 지침에 따라 578개로 총 1,020개의 제품이 판매 금지조치를 받았다. 그 중 시험 부적합으로 339개의 제품이 그리고 마킹 부적합으로 681개의 제품이 판정 받아 판매 금지 되었다. 표5-15는 총 571건이 위반으로부터 약 1,300,000유로의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2003년에는 약 1,000,000유로가 부과된 실적이 있다.

표 5-14 판매중지 제품 개수

	2004년도	2003년도
판매중지 제품 개수	1,020	528
EMC 지침	442	232
• 시험 부적합	290	
• 마킹 부적합	152	
R&TTE 관련	578	296
• 시험 부적합	49	
• 마킹 부적합	529	

표 5-15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실적

	2004년도	2003년도
건수	571	451
전체 부과 금액	약1,300,000유로	약1,000,000유로

표5-16은 위반제품에 세이프 가드를 적용한 실적을 설명하고 있다. EMC와 R&TTE 지침의 9조에 따라 내려진 세이프 가드는 각각 12건과 118건이 있었다. 여기서 LCD 모니터(1), Motherboard(2), DVD Player(1), Lightning chain(1), Mixer(1), vacuum cleaner(1)등 12건이 EMC지침을 어겼으며, radio controlled toys, radio controlled ship, radio controlled cars등 118건이 R&TTE 지침을 위반하였다.

표 5-16 세이프 가드 적용 실적

	2004년도		2003년도	
	EMC지침	R&TTE지침	EMC지침	R&TTE지침
건수	12	118	4	120
총 건수	130		124	

## 제 5.3 절 미국

### 5.3.1 사후관리 규정

#### 가. 절차

TCB의 권한 중 sub-contract 시험소에 대한 사후관리 기능이 있으며 인증을 내어준 제품에 대하여 일 년에 한 두 번의 사후관리실적(2%)을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할 의무가 있다. TCB는 인증신청서 양식과 인증 승인서의 전자 복사본을 FCC에 제출하여야 한다. ISO/IEC Guide 65에 따라, TCB는 적절한 사후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후관리 활동은 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체 제품형식 중에서 몇 개를 형식 시험하는 것이다. FCC는 인증기관에 의해서 인증된 제품의 목록을 언제나 요구할 수 있으며, 제품의 평가 보고서의 복사본을 요청하여 받을 수 있다. FCC는 TCB가 FCC의 지침 하에 TCB가 인증하였던 특정 제품의 사후관리를 수행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만일 인증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인증기관이 적용 할 수 있는 기술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결정하면, 인증기관은 즉시 인증자와 FCC에 알려야 한다. 검토 보고서는 인증자가 수정 조치를 취한 후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 나. 대상기기의 확보

- 근거 규정: FCC Part 2.956(FCC Inspection and submission of equipment for testing)
  - (a) 책임 당사자는 FCC의 요청이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1) FCC Part 2.955(Retention of records)에 의해서 요구된 기록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 (2) 위원회 시험소에서의 측정을 하기 위하여 한 개 이상의 표본을 제출한다.
      - ① 위원회 시험소로 배달하는 비용과 회수하는 비용은 책임 당사자가 지불하 여야 한다.
      - ② 책임 당사자가 장비의 크기나 무게 또는 전력 요구조건 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 때문에 위원회의 시험소에 표본을 배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책임 당사자는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도 있다.
  - (b) 규정 2.955에 따른 기록이나 표본을 제출하기 위한 요구는 FCC Part 2.946(Penalty for failure to provide test samples and data) 에서 규정되어 있다.

## 다. 통관 시 사후관리

FCC의 규제활동은 연방통신법에 의하여 시행되며, 제품의 수입 규정에 있어서는 인증되지 않은 제품은 통관할 수 없으며, 인증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전시나 광고를 할 경우에는 미 취득 제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는 법에 따라 판매, 전시 및 광고 등의 유통전반에 걸친 강력한 제재가 수반된다. 미국 내에 수입된 모든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시장에서 수거한 제품들은 FCC의 Measurement Branch에서 시험된다. FCC는 매년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불합격 시 판매중지, 수거 및 별

금을 부과한다. 표본 추출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그 중에서 광고나 경쟁자의 고발 등에 의해서 실행될 수도 있다. 만일 표본 추출 검사 후에 위반 제품이 적발되는 경우는 약 US\$2,000/일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DoC 방식으로 FCC 규격을 따르는 제품에 대해 FCC는 미국 내 대리인에게 제품의 조사결과 및 결함에 대한 수정, 보완사항을 포함하여 제품의 양산, 유통, 사용에 따른 조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적합성 확인을 위해 수시로 제품의 시료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벌금이나 행정적인 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시험데이터는 14일, 시료는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여야 한다.

### 5.3.2 사후관리 조치

사후관리 위반 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한다.

#### □ 위반 규정

- FCC Part 2.937(Equipment Authorization Procedures)
- FCC Part 2.803(Marketing of radio frequency devices prior to equipment authorization)
-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위원회에서 발행된 인증된 면허, 승인, 인증 또는 다른 도구의 규정을 근본적으로 따르지 않은 자.
-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1934년의 통신법의 어떤 조항 또는 조약, 조례 또는 미국이 당사자로 된 그 밖의 협정을 따르지 않는 자
- 통신법 제317(c)조나 제508(a)조의 조항을 위반한 자
- 미국법령 title 18의 1304, 1343 또는 1464의 조항을 위반한 자

#### □ 벌금 규정 : FCC Part 1.80(Forfeiture proceedings)

- 벌금을 결정할 때, 위원회나 그것의 지정을 받은 자는 위반

의 성격, 환경, 위반 정도와 중대성 그리고 위반자에 대한 유죄의 정도, 전과,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한다.

□ 위반 시 벌금 내역

- 인증되지 않은 장비를 수입하거나 판매한 경우 \$7,000
- 인증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한 경우 \$5,000
- 원회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4,000
- 요구된 형식이나 정보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3,000

## 제 5.4 절 일본

### 5.4.1 사후관리 규정

그림5-9는 VCCI의 조직도이다. VCCI의 시장 발취 시험 전문 위원회는 자주 규제 조치 운영규정의 시장 취급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장 발취 시험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정보통신 기기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사후 관리를 시행한다. 시장 발취 시험 전문 위원회 (Market Sampling Test Sub-committee)는 의장 1명, 위원 6명, 비서 1명 연락 인력 1명, 옵서버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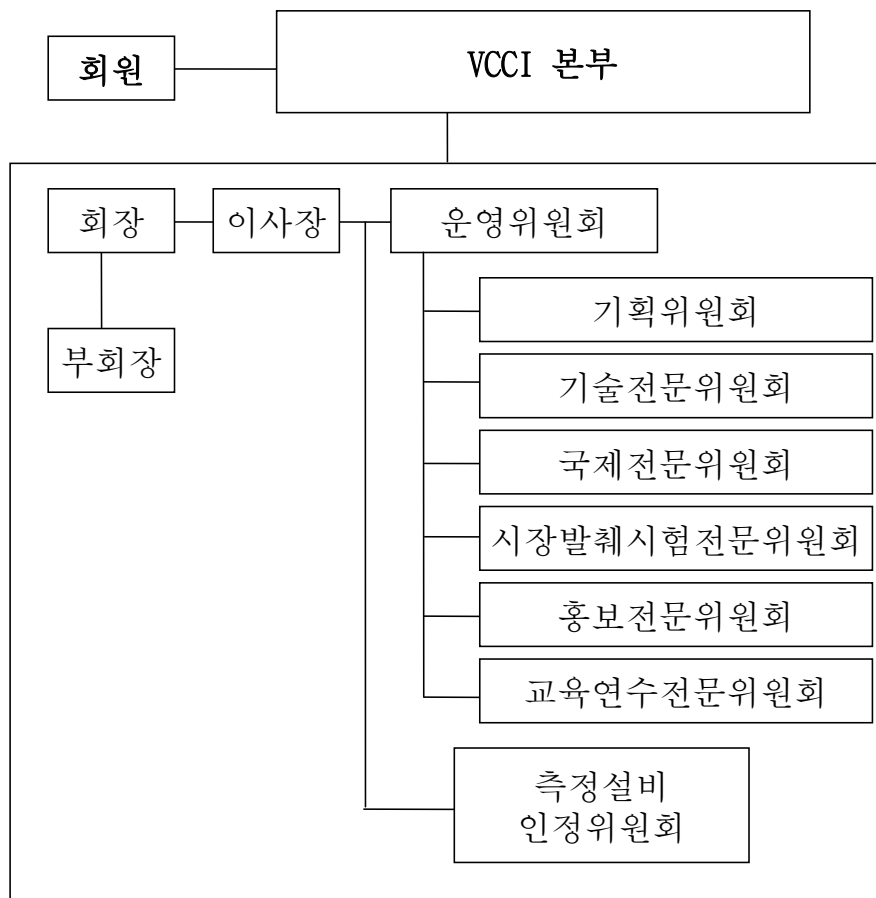


그림 5-9 VCCI의 조직도

표5-17은 시장발체시험에 관한 규정의 내용이다.

표 5-17 시장발체시험에 관한 규정

조항	내용	조항	내용
제1조	목적	제9조	시험결과의 통지 등
제2조	시장선정전문위원회	제10조	대상기기등의 반환
제3조	시험대상기기선정	제11조	부적합기기의 처리 절차
제4조	대상기기의 선정방법	제12조	추가시험
제5조	회원의 동의	제13조	양식
제6조	시험기관에의 위탁	제14조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의 취급 등
제7조	시험의 방법	제15조	OEM 제품의 취급
제8조	비밀보장의무	해설	



그림5-10은 사후관리 처리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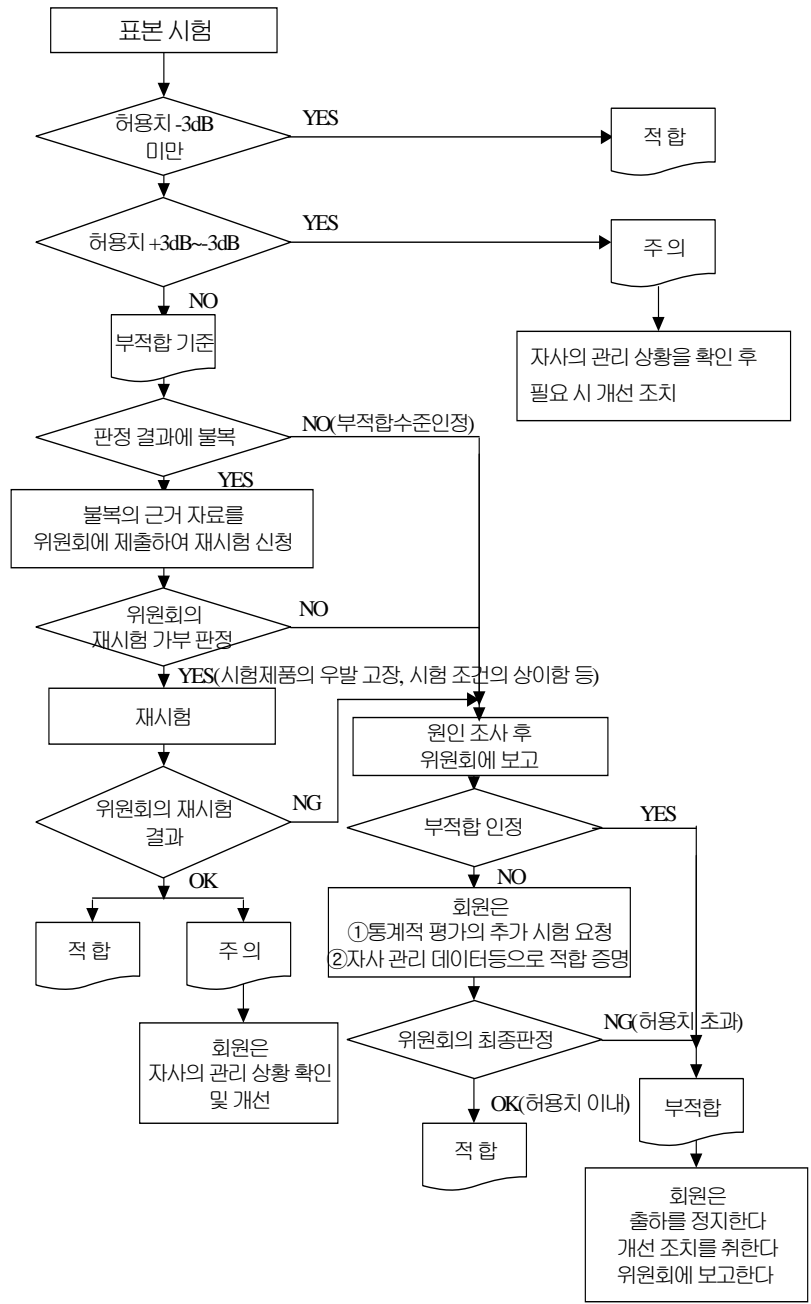


그림 5-10 사후관리 절차

#### 5.4.2 시험 대상의 선정 방법

VCCI는 시장 발취 시험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대상 기기의 표본을 직접 구매하거나 회원으로부터 출하제품이나 그와 동등한 제품을 대여한다. 시장 발취 시험은 실제로 사용되는 상태에 가깝다고 판단하는 조건 하에서 적합 확인 신고서에 첨부된 시스템 구성도에 근거하여 실시된다. 표5-18은 대상기기선정 방법 및 시험관 관련한 사항을 요약한 표이다.

표 5-18 사후관리 시행 방법

	내 용
선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발취시험전문위원회의 의견에 의함</li> <li>• VCCI가 판매점등에서 구매한다.</li> <li>• VCCI가 회원으로부터 출하 제품, 또는 출하 제품과 동등의 제품을 대여한다</li> </ul>
시험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기 반입 비용, 회원의 선택에 의거해 실시하는 재 시험 비용 등)을 부담한다.</li> <li>• 재시험비용을 제외한 시험 비용은 협의회에서 연도 마다 재검토하여, 협의회가 부담하는 할 수도 있다.</li> </ul>
시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자는 시장 발취 시험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추가 시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 후 또 다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VCCI는 제조자에게 적절한 개선 대책을 세워 VCCI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li> <li>• 부적합의 정도에 따라 시장 발취 시험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필요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li> <li>• 대량 생산된 제품은 그들의 불량률이 제12조 2항에 규정한 허용한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li> </ul>

### 5.4.3 부적합 기기의 처리 절차

적합성 승인을 받은 기기가 발취 시험에서 적합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면 제조자는 시장 발취 시험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추가 시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 후 또 다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VCCI는 제조자에게 적절한 개선 대책을 세워 VCCI에 그 결과를 보고 할 것을 요구한다. 시장 발취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부적합의 정도에 따라 시장 발취 시험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필요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 밖에도 대량 생산된 제품은 그들의 불량률이 제12조 2항에 의한 허용한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표5-19는 시험 결과의 통지 및 그에 따른 처리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표 5-19 사후관리 결과의 처리 절차

	내 용
시험 결과의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 기관은 시험 종료 후 신속하게 시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험 결과를 VCCI에 보고하여야 한다.</li> <li>• VCCI는 시험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재조사 등의 조치를 취한다.</li> <li>• VCCI는 회원이 시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이의를 제출했을 경우, 시험 기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회원에게 설명할 것을 통보한다.</li> </ul>
선정기기등의 반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기관은 대상 기기 이외에 시험 기관이 시험에 필요하여 제공을 요구한 기자재 및 자료를 회원에 반환하여야 한다.</li> </ul>
부적합기기의 처리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자는 시장 발취 시험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추가 시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 후 또 다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VCCI는 제조자에게 적절한 개선 대책을 세워 VCCI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li> </ul>

	<p>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적합의 정도에 따라 시장 발취 시험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필요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li> <li>• 대량 생산된 제품은 그들의 불량률이 제12조 2항에 규정한 허용한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li> </ul>
--	--

#### 5.4.4 사후관리 실적

VCCI의 규정에 의해, 시험의 결과로 최종 부적합이 되었을 경우는, 기관지에 공표한다. 다만, 개선 조치와 VCCI에 보고가 적절히 되었을 경우는 부적합품의 형식만을 공표한다. 표5-20은 2004년도 시장발취시험 실시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표 5-20 시장발체시험 실시 실적(2004년도)

선정기준		선정 건수	중지 (미출 하등)	시험 유효 건수	완료 건수	판정결과		
						합격	주의	불합 격
대여 시험 계		101	49	52	52 (68)	19 (37)	29 (31)	4
제1회	지금까지 대상으로 되지 않은 회원 (회원내림차순)	32	11	21	21	10	9	2
제2회	시장 성장 제품 (PC,모니터,광드라이브 등)	29	18	11	11	1	9	1
제3회	지금까지 대상으로 되지 않은 회원 (회원내림차순)	40	20	20	20	8	11	1
시장구매 시험 계		45	8	37	37 (16)	26 (5)	11 (11)	0
제1회	신규의 성장제품 (PC,모니터,광드라이브 등)	29	4	25	25	18	7	0
제2회	양판점에서 직접구입 (HDD player 외)	16	4	12	12	8	4	0
총계		146	57	89	89 (84)	45 (42)	40 (42)	4
괄호안은 2003년도 실적임								

표5-21은 판정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표 5-21 판정 기준

	적합	주의	부적합
방해파 전기장 강도	허용치-3 dB미만	허용치±3 dB이내	허용치+3 dB초과
전원 포토 전도 방해파	허용치-2 dB미만	허용치±2 dB이내	허용치+2 dB초과

주: 「주의」가 된 회원에게 자사의 관리 상황을 확인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개선 대책을 요청하였다. 「부적합」이 된 회원에게 개선 조치와 통고를 해 주었다. 또한 부적합품의 「형식」을 공표하였다.

## 제 6 장 SDoC 제도

### 제 6.1 절 서론

제조자 자기적합선언(SDoC: Supplier Declaration of Conformity)이란 제조자가 주체적으로 자사가 생산하는 제품이 규격에 적합한지를 시험·선언·등록하는 절차이다. 이것은 ISO/IEC Guide 2에 제조자가 제품이나 공정 혹은 서비스가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서면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되어져 있으며, 어떤 제품영역이나 제품 특성에 활용될 수 있다. 이 시험은 제조자에 의해서 실행되거나 제조자와 계약을 맺은 시험기관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다. 자체 시험과 그에 따라 적합성선언을 하는 제조자는 ISO/IEC 17025를 따라야 하며, 규제당국이 제조자의 시험설비를 완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규제당국이나 규제당국이 인정하는 시험소인정기구에 의해 제조자의 검사설비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SDoC는 시장에서의 제품의 성능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제조자의 제품에 대한 책임과 자신의 명성을 시장에서 유지하려는 의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제도는 정부와 같은 공공당국이 시행하는 효율적인 시장감시제도에 의해서 강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조자는 적합성선언을 보증할 수 있는 충분한 서류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제조자 자기적합선언은 감시당국이 비 적합제품을 공급하는 제조자를 적발할 수 도록하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SDoC 절차는 기업비밀이나 지적 재산권 보호 및 시장접근의 적시성 등을 적절하게 보장해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만약 제조자가 제3자인증을 받는다면 제조자의 적합성 자체선언은 제품인증에 있어서 보다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 6.1.1 SDoC 도입의 필요성

SDoC가 도입됨에 따라 기업이 얻게 되는 일반적인 이점은 다음과 같다.

- **비용절감** : 제3자 인증에 요구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즉, 이 절차는 제조자가 제3자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에 이 인증비용이 포함되지 않으므로써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제조자는 규제당국이나 시험소인정기구로부터 받아야 하는 시험 설비에 대한 검사 비용은 별도로 고려되어야 한다.
- **유통에 소요되는 시간의 단축** : 제조자가 규제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최근의 정보통신 관련 제품의 수명 주기가 짧아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인증을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은 제품의 경쟁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기술 유출로부터의 보호** : SDoC 절차는 자체의 시험기관에서 인증을 함으로써 기업비밀이나 지적 재산권 보호 및 시장접근의 적시성 등을 적절하게 보장해준다.
- **쉬운 설계변경** : 제조자가 설계변경을 할 경우 인증사항 변경에 요구되는 사항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개발과 혁신을 자극하게 된다. 그러므로 제조자는 제품의 다양한 범위와 새로운 특징을 선언할 수 있다.
- **제조자의 원료선택에 대한 유연성** : 적합성의 책임은 최종제품의 적합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최종제품이 전체적으로 적합할 수 있다면 부품이나 원료의 성능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 **혁신적인 시험과 평가방법이 가능** : 검사와 평가에 있어서 매우 유연한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공인된 인정을 통해서 제조업체가 자기들의 제품의 안전을 시



협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독립성과 능력을 인정받는다면 제3자 인증기관과 같은 지위가 확보되어야 한다. 제조업체가 자사의 이름을 부착하고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회사와 제품에 대한 책임과 명성을 판매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의식이 제3자 인증 못지않은 철저한 제품시험이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나 SDoC가 극 소수의 대기업에 의해서 주도 된다면, 중소기업들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인증마크가 필요하며 인증마크를 통하여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들과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다.

### 6.1.2 SDoC의 종류

WTO, ISO/IEC 등 국제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SDoC의 유형은 제품의 적합성 선언을 위한 시험기관과 제품의 규제기관 등록의 유무에 따라 SDoC-A/B/C/D의 4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으며 표6-1과 같다.

표 6-1 SDoC의 종류

SDOC 형식	A	B	C	D
자체 시험기관			O	O
인정된 시험기관	O	O		
제품의 규제기관 등록	O		O	

SDoC-A와 SDoC-B는 인정된 시험기관 시험 성적서에 따라 적합성을 선언하고 SDoC-A는 이를 규제기관에 등록하는 유형이다. SDoC-C와 SDoC-D는 자체 시험기관에서 시험하여 적합성 선언을 하고 SDoC-C는 이를 규제기관에 등록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정리하면 표6-2와 같다. A에서 D로 갈수록 자율성이 부여되고 있으며 시험기관이 지정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시험결과에 대한 신

뢰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표 6-2 SDoC 종류별 세부 내용

SDoC의 종류	세부 내용
SDoC-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정된 시험기관에서 시험실시</li> <li>• 시험성적서 원본 보관</li> <li>• 적합성 선언하고 규제기관에 등록</li> </ul>
SDoC-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정된 시험기관에서 시험실시</li> <li>• 시험성적서 사본 보관</li> <li>• 적합성 선언</li> </ul>
SDoC-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 시험기관에서 시험실시</li> <li>• 시험성적서 원본 보관</li> <li>• 적합성 선언하고 규제기관에 등록</li> </ul>
SDoC-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정된 시험기관에서 시험실시</li> <li>• 시험성적서 원본 보관</li> <li>• 적합성 선언</li> </ul>

## 제 6.2 절 외국의 SDoC 제도

### 6.2.1 미국

미국의 SDoC는 EU의 경우처럼 기기의 자유로운 유통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전반적인 규제의 효율화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미국의 DoC 인증제도는 SDoC-A에 해당하며 PC 및 주변기기가 대상기기이다. 유선전화기의 SDoC 인증은 SDoC-B에 해당한다. 그리고 입증(Verification) 인증제도는 SDoC-D에 대응하고 대상기기로서 ISM 기기, TV 수신기 등이 있다. 이에 관하여 표6-3에서 요

약하고 있다.

표 6-3 미국의 SDoC 현황

인증제도	세부 내용
Do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DoC-A</li> <li>• PC 및 주변기기</li> </ul>
SDo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DoC-C</li> <li>• 유선 전화단말기</li> </ul>
Verifi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DoC-D</li> <li>• ISM 기기, TV 수신기 등</li> </ul>

### 6.2.2 유럽

유럽의 자기적합선언은 기기의 유럽 내 유통을 자유화하는 전 반적인 EU의 시장 통합의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또한 이 제도는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이 있는 정부에 의한 기기의 인증 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인증자가 인증을 위해서 부담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유럽의 CE 마크는 제품의 안전과 사용자의 건강, 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유럽 통합 규격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표시이며, 유럽연합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제품에는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거나, 자체 선언에 의해 반드시 CE 마크를 부착하여야 하는 강제규격이다. 따라서 CE 마크는 제조된 제품이 유럽 공동체의 해당 지침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기술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나타내는 심볼 마크로, 유럽 공동체 내에서 제품을 자유롭게 유통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증명서라고 할 수 있다.

8개 모듈의 CE 인증 절차 방식 중에서 제품이 어느 모듈에 의한 승인 방식을 따라야 하는지는 각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모듈 A의 적합성 평가절차는 자기적합선언에 해당한다. 모듈 A는 공인시험기관의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제조자의 기술 문서 작성 및 자기 적합선언에 의해 CE 마크를 부착하는 절차이다.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기기가 송신용 단말기인지 또는 수신용 단말기인지에 따라 그리고 이것이 유럽연합이 정하는 표준을 따르는지의 여부 등을 주요 기준으로 하여 적합성 선언의 정도를 달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지상/우주 통신용으로 할당된 주파수를 이용하지 않는 통신용 단말기 및 무선장비의 수신부 기기는 적합성 선언 중에서도 규제기관으로부터의 간섭이 가장 적은 수준의 것인 ANNEX II를 택할 수 있다.
- 무선통신용 기기 중에서 유럽연합의 표준을 택하는 것은 ANNEX II에 무선통신용 시험을 추가하는 방식, 즉 무선통신용 기기로서는 가장 완화된 수준의 적합성 선언 방식을 택할 수 있다.
- 무선통신용 기기 중에서 유럽연합의 표준을 따르지 않는 기기는 위와 같은 완화된 방식을 택할 수 없다. TCF를 작성하거나 ANNEX V 방식 중에서 택하여야 한다.

### 제 6.3 절 국내의 SDoC 제도의 도입

국내에서는 인증기관의 인증 없이 제조업체가 스스로 기준 적합 제품임을 선언하는 자기적합선언(SDoC) 제도를 도입을 추진하는 등 민간주도형 인증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인증 시험항목을 축소하는 등 인증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자파 적합 등록 대상기기 중 휴대전화를 제외하고 SDoC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며, 대상기기를 제조, 수입한 자가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SDoC를 한 후 그 결과를 전파연구소에 등록하는

절차로 SDoC를 운용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SDoC의 도입 필요성에 있어서 유럽연합의 경우와는 다르지만 규제 개혁의 효율성에 바탕을 두고 도입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와 같다. 지정되지 않은 시험기관에서 시험하는 경우 교정, 품질 시스템 등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국내의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SDoC-A 유형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적합성 선언을 한 제품을 규제기관에 등록함으로써 시장에 판매된 제품의 사후관리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 SDoC를 한 많은 제품들이 매우 안전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관련 산업계도 무책임한 제조자를 시장에서 축출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WTO/TBT 협정문에 따라 고위험 제품에 대해서만 강제 인증을 규정하고 제조자의 적합성 선언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SDoC를 한 제품을 감독하기 위한 시장 감시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시장에서 제품을 표본 추출하는 방안, 수입품 제조자 적합성 선언문을 확인하는 절차, 시장 감시제도 등의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 7 장 결 과

### 제 7.1 절 전파법과 전기통신기본법의 인증관련 법규

#### 가. 인증 및 사후관리 관련 전기통신기본법과 전파법 조항의 개정

표 7-1 인증 및 사후관리 관련 전기통신기본법과 전파법 조항

전기통신 기본법	전파법	비고
제33조(형식승인)	제46조(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제57조(전자파적합등록)	
제33조의2(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46조의2(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등)	전파법46조4,5항의 독립
제33조의3(형식승인의 국가간 상호인정)	제46조의4(형식등록 및 형식검정과 전자파적합등록의 국가간 상호인정)	전파법79조1항(다른법률의 준용)을 대체
제34조의2(형식승인의 해지)	제46조의3(형식등록 및 형식검정의 해지)	전파법에 신설
제35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74조(형식검정 및 형식등록의 취소 등)	
	제75조(전자파적합등록의 취소)	
제45조의2(청문)	제77조(청문)	
제36조(사후관리)	제53조(조사 및 조치)	
제49조(벌칙)	제86조(벌칙)	
	제87조(벌칙)	
제53조(과태료)	제92조(과태료)	

표7-1은 인증관련 전기통신기본법과 전파법 조항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 전파법 제46조제4항, 제5항의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2(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등)와 같이 분리시켜 조항을 신설
- 국가 간 상호인정 절차에 관한 규정인 전파법 제79조제1항(다른 법률의 준용)을 전파법제46조의4(형식등록 및 형식검정과 전자파적합 등록의 국가간 상호인정)으로 대체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3(형식승인의 국가 간 상호인정)의 형식과 같도록 개정
- 전기통신기본법 제34조의2(형식승인의 해지)에 해당하는 조항을 전파법에 신설

#### 나. 전파법과 전기통신기본법의 벌칙 규정

표7-2는 전파법과 전기통신기본법의 인증과 관련된 법령을 처분기준을 포함하여 유사한 위반 내용끼리 비교한 표이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두 법령의 위반내용이 서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두 법령의 처분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으며, 어떤 위반내용은 한 법령에만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기기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시험을 거부, 방해한 경우는 기본법은 과태료 처분대상이지만 전파법의 경우는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되어, 같은 위반내용에 대하여 양 법 간에 처벌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표 7-2 전파법과 전기통신기본법의 벌칙 규정 비교표

위반내용	근거조항	처분기준	비고
형식검정,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지 않은 기기를 제작, 수입한 경우	전파법 제84조 제2호	3년이하정역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형성을 일차 시 형량을 일차 있음 필요가 있음
형식승인을 얻지 않은 기기를 제조, 판매, 수입한 경우	기본법 제48조	3년이하정역 또는 3천만원이하벌금	
형식검정,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 기기에 대한 사후관리조사·시험을 거부, 방해한 경우	전파법 제86조 제1호	1년이하정역 또는 500만원이하벌금	형성을 일차 시 형량을 일차 있음 필요가 있음
조사·시험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	기본법 제53조 제1항 제8호	1천만원이하과태료	
형식검정,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지 않은 기기의 판매,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 운송, 보관	전파법 제86조 제2호	1년이하정역 또는 500만원이하벌금	형성을 일차 시 형량을 일차 있음 필요가 있음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전기통신기자제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기본법 제49조 제6호	1년이하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표 7-2 (계속)

위반내용	근거조항	처분기준	비고
형식검정,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 관련 불법 유통 기기에 대한 시정, 철거, 파기, 수거, 사용중지 위반	전자파법 제86조 제4호	1년이하징역 또는 500만원이하벌금	형평성을 위하 시 형평성을 일차 시킬 필요가 있음
기술기준 부적합 전기통신기자재에 대한 생산 중지 명령 위반	기본법 제49조 제7호	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형식검정,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 기기에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에 이를 설치한 경우	전자파법 제90조 제3의2호	300만원이하과태료	형평성을 위하 시 형평성을 일차 시킬 필요가 있음
형식승인 기기의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전기통신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기본법 제53조 제1항 제6호	1천만원이하과태료	
형식검정,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 기기의 성능을 개조, 변조, 복제한 경우	전자파법 제84조 제3호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기본법에 유사 조항 신설 필요
-	-	-	

표 7-2 (계속)

위반내용	근거조항	처분기준	비고
형식검정,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 기기의 변경 신 고 규정을 위반	전자파법 제92조 제3호	100만원 이하과태료	유사 기본법에 조항 신설 필요
-	-	-	
불량품으로 판정된 전기통신기자재를 생산 또는 입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기본법 제53조 제1항 제7호	1천만원 이하과태료	유사 전자파법에 조항 신설 필요

## 다. 인증제도 개편을 위한 전파관계 법령 개정안

표7-3은 전파법의 인증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으며, 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전파법 제46조제1항에서의 인증을 받는 자의 범위에 판매자를 추가하고 제3항을 행위자의 의무를 강조하도록 문항을 수정
- ② 제6항의 인증사항 변경에 있어서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③ 제46조제4항과 제5항의 내용이 성능시험기간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을 제46조의 2(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등) 조항으로 독립시킴.
- ④ 인증의 해지에 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34조의 2항을 참고하여 전파법에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의 해지 규정을 제46조의3 제1항과 제2항에 신설
- ⑤ 전파법 제46조의 4에 국가 간 상호인정 조항을 신설하여 전기통신기본법령과 균형을 유지
- ⑥ 전파법 제53조(조사 및 조치) 규정에서는 위반이 있을 경우에만 조사하는 것을 필요한 경우에 조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사후관리의 유연성을 높임.
- ⑦ 제74조(형식검정 및 형식등록의 취소 등) 규정의 위반내용을 각호로 분리하여 인증규칙에서 행정처분을 달리 적용
- ⑧ 제84조제3호의 규정에서 기기의 성능을 개조·변조·복제한 것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게까지 벌칙을 부과하도록 개정
- ⑨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얻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제84조 제5호에 신설
- ⑩ 전기통신기본법제53조제1항7호를 참고하여 불량기기를 생산·수입·

판매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제6호에 신설

- ⑪ 전과법 제86조제2호의 규정은 동법 제90조제3의 2호와 중복되어 있으므로 삭제
- ⑫ 제90조제3의호에 판매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





표 7-3 (계속)

제53조 (조사 및 조치)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제25조·제26조·제29조·제45조·제46조·제52조·제57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 (조사 및 조치)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제53조(조사 및 조치)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에 관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필요한 경우	기본법 제36조
제74조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의 취소 등) 3. 형식검정 합격표시 또는 형식등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때	제74조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의 취소 등) 3. 형식검정 합격표시 또는 형식등록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	3. 형식검정 합격표시 또는 형식등록표시를 허위 또는 한 때	3. 형식검정 합격표시 또는 형식등록표시를 허위 또는 한 때	
제84조 3.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기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합등록을 한 기기의 성능을 개조·변조·복제한 자	제84조 3.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기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합등록을 한 기기의 성능을 개조·변조·복제한 자	제84조 3.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기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합등록을 한 기기의 성능을 개조·변조·복제하는 자	제84조 3.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기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합등록을 한 기기의 성능을 개조·변조·복제하는 자	
		5.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확한 방법으로 인증을 얻은 자	5.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확한 방법으로 인증을 얻은 자	
		6. 제53조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기기를 생산 수입 판매 진열한 자	6. 제53조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기기를 생산 수입 판매 진열한 자	기본법 제53조1항 7호

표 7-3 (계속)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비고
	5.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확한 방법으로 인증을 얻은 자	조항 신설 적합한 과	
	6. 제53조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 결과 불량으로 판정된 기기를 생산 수입 판매 진열한 자	과유하 법위하 형 기본법 제53조1항 7호	



## 라. 행정처분 기준 개정안

표 7-4는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제13조1항을 위반했을 때 처분기준의 개정안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 제품을 유통시키는 것은 부적합기기를 유통시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인증취소 및 파기·수거명령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되도록 개정한다.
- ②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으로만 행정처분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생산·수입 중지 및 수거·시정명령의 행정처분으로 개정한다.
- ③ 위반 내용이 정보통신기기에 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의 인증취소 및 수거명령의 행정처분은 부적합기기를 유통한 것이 아니므로 2차 위반 시 수거명령으로 개정한다.
- ④ 정보통신기기에 인증표시를 허위로 한 기기란 불법기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표시 규칙 위반 기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반 내용을 “정보통신기기에 인증표시 규칙을 위반한 때”로 개정하고 2차 위반 시 인증취소 및 수거명령으로 개정한다.
- ⑤ 정보통신기기의 기술기준 변경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의 1차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으로 2차 위반 시에는 인증취소의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한다.

표 7-4 정보통신기기 인증취소 등의 처분기준 개정안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현행	1. 허위 기타 부정확한 방법으로 인증을 얻은 때	○ 전기통신기본법 제35조제1항제1호 ○ 전파법 제74조제1항 제1호 및 제75조	인증취소	
개정	유지	유지	인증취소 및 파기·수거명령	
현행	2. 정보통신기기가 당해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전기통신기본법 제35조제1항제2호 ○ 전파법 제74조제1항 제2호 및 제75조	시정명령 또는 생산·수입 중지 및 수거명령	인증취소 및 파기·수거명령
개정	유지	유지	생산·수입 중지 및 수거·시정명령	해당없음

표 7-4 (계속)

현행	3. 정보통신기기에 인증 표시를 하지 아니 한 때	인	○ 전기통신기 본법 제35조제1항 제3호 ○ 전파법 제74조제1항 제3호 및 제75조	시정명령	인증취소 및 수거명령
개정		유지	유지	유지	수거명령
현행	4. 정보통신기기에 인 증 표시를 허위로 한 때	인	○ 전기통신기 본법 제35조제1항 제3호 ○ 전파법 제74조제1항 제3호 및 제75조	시정명령	인증취소
개정	4. 정보통신기기에 인증 표시의 규칙을 위반 한 때	인증	유지	유지	인증취소 및 수거명령
현행	-	-	-	-	-
개정	5. 정보통신기기에 대 한 기술기준 변경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대	○ 전기통신기 본법 제33조 제5항 ○ 전파법 제74조제1항 제4호 및 제75조	시정명령	인증취소

## 제 7.2 절 사후관리조치에 관한 국내법과 독일법의 비교

표7-5는 주요 위반내용에 대한 독일의 EMC법에 의거한 처벌규정이다.

표 7-5 독일 EMC 법의 처벌 규정

위반내용	행정처분	위반자의 벌칙
CE 마크부착 원칙을 위반하여 장비를 시장에 들여오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하거나 작동하는 경우	장비회수	최고 5십만 유로 벌금
다른 마크의 부착으로 CE마크의 시각성 및 명료성을 훼손시킨 경우	장비회수	최고 5만유로 과태료
장비 작동에 관한 데이터의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장비를 작동시키는 경우	장비회수	최고 5천유로 과태료
표준이 없는 송신기를 시장에서 상업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하거나 작동시키는 경우	장비회수	최고 5만유로 과태료

표7-6은 유사 위반 내용에 대한 독일 EMC법과 국내의 관련법의 처벌규정을 비교하고 있다.

표 7-6 독일 EMC법에 대응한 국내법의 처벌 규정

위반내용	벌칙		
	EMC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자파법
인증 없이 판매 및 전시, 운송, 보관한 자	<b>제8조2항</b> 최고 5십만 유로 벌금	<b>제49조2항</b>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b>제86조2항</b>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표장 부착 없이 판매 및 유통한 자	<b>제8조2항</b> 최고 5십만 유로 벌금	<b>제53조6항</b> 1천만원 이하 과태료	<b>제87조2항</b>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장치의 불량 사항 개선 요구 불이행한 자	<b>제8조3항,4항</b> 최고 5십만 유로 벌금	<b>제53조7항</b>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인증 마크를 오인시키기 위해 비슷한 모양의 마크를 부착한 자	<b>제8조5항</b> 최고 5십만 유로 벌금	-	-
전자파 장애 발생 원인의 해결 및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	<b>제8조6항</b> 최고 5십만 유로 벌금	-	-
전자파 발생지에 대한 수사 거부한 자	<b>제8조8항</b> 최고 5십만 유로 벌금	-	-

표 7-6 (계속)

위반내용	벌칙		
	EMC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장비의 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b>제9조1항</b> 최고 5십만 유로 벌금	-	-
검 사 · 조 사 및 시험을 위 한 장비의 수 거를 거부한 자, 또는 방해 자	<b>제9조2항</b> 최고 5십만 유로 벌금	<b>제53조8항,10항</b> 1천만원 이하 과태료	<b>제86조1항,4항</b>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규 제 국 으 로 부 터 위임받은 자에게 정보 제공 의무 및 조치를 거부 한 자	<b>제9조2항</b> 최고 5십만 유로 벌금	<b>제53조3항</b>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인증마크 부 착 원칙 위반 한 자	<b>제12조1항1호</b> 최고 5만유로 과태료	-	-
다른 마크로 인해 승인마 크의 혼돈을 초래한 자	<b>제12조1항3호</b> 최고 5만유로 과태료	-	-
장 비 작 동 에 관한 데이터 의 보존의무 를 이행하지 않은 자	<b>제12조1항4호</b> 최고 5만유로 과태료	<b>제53조9항</b>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표 7-6 (계속)

위반내용	벌칙		
	EMC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표준 없는 송신기의 판매 절차 불이행한 자	<b>제12조1항6호</b> 최고 5만유로 과태료	-	-
인증서 및 기술문서 보관 기간을 위반한 자	<b>제12조2항</b> 최고 5천유로 과태료	-	-
장비인도 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	<b>제12조5항</b> 최고 5천유로 과태료	-	-
전시 및 박람회 장비에 대한 정보제공을 불이행한 자	<b>제12조7항</b> 최고 5천유로 과태료	-	-
구성품의 기술 문서의 제공을 불이행한 자	<b>제12조8항</b> 최고 5천유로 과태료	-	-

표7.7에서 알 수 있듯이 독일의 EMC 법에는 처벌 항목이 전기통신 기본법과 전파법 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처벌 규정을 보다 상세하게 분류해 놓게 되면, 법규 위반에 대한 법 집행에 있어서 임의성을 줄일 수 있게 되므로, 이러한 관점으로 국내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 7.3 절 사후관리의 개선 방안

### 7.3.1 사후관리 업무 처리 지침 제정

전기통신기본법 제36조, 전파법 제53조,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제10조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처리절차 등을 정하는 지침을 제정한다(가칭 정보통신기기 사후관리업무 처리요령). 이 지침에 포함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간사후관리계획의 수립
  - 전년도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 원인 등의 분석결과에 따른 중점추진 방향 수립
  - 분야별 사후관리 목표 설정 및 시료확보의 방법, 절차 등 세부추진 계획
  - 중점관리대상기기의 선정
  - 기타 사후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 수시관리 실시 대상기기 선정기준을 정한다.
  - 민원이 제기된 경우
  - 중앙전파관리소·체신청 등 유관기관에서 요청한 경우
  - 전기통신망 또는 전파통신 이용질서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무단변경, 개조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기술기준 부적합 기기의 생산·수입·판매를 인지한 경우
- 중점관리대상기기 선정기준을 정한다.
  - 민원이 발생한 기기
  - 지정시험기관의 성능시험, 유관기관 검사 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기
  -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기기
  - 기술기준 제·개정으로 인하여 인증대상기기로 추가된 기기



- 전기통신망 또는 전파이용 질서에 위해를 발생한 기기
- 변경신고의 이행여부가 의심되거나 변경이 빈번한 기기
- 사후관리 조사·확인사항은 인증여부, 인증표시의 적정성, 변경신고 등의 이행여부에 한하도록 한다. 인증 받은 자로부터 정보통신기기를 제출받아 시험 또는 확인 할 수 있는 범위와 확보방법을 정한다.
  - 시정명령 등에 따른 조치가 완료된 경우로서 당해 기기에 대한 시험 또는 확인이 필요한 정보통신기기
  -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정보통신기기
  -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시험 후 처분하여 활용하기 어려운 정보통신기기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시험을 요청하는 정보통신기기
  - 특수 제작되어 특정업체에 공급되거나 특정서비스를 가입하는 조건으로 판매되어 구매하기 어려운 정보통신기기
  - 유통 중인 기기는 현지에서 선정한 후 인증을 받은 자의 동의를 얻어 직접 반입
  - 유통 대기 중인 기기는 인증을 받은 자의 동의를 얻어 보관 장소에서 선정하여 반입
- 부적합판정기준 및 성능시험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 조사·확인결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당해 기술기준에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 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 규칙 제8조 및 운영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인증표시 사항이 허위 또는 누락된 경우
- 사후관리 조사·확인결과와 통보 및 조치사항을 명시하고 당사자가 원할 경우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소장은 조사·확인·성능시험 등의 결과 및 위규 사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내용을 인증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정명령

- 등을 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 조치기간 및 결과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소장은 당해 기술기준에 부적합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2대 이하의 기기를 추가로 구입하거나 당사자로부터 제출받아 재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재시험 결과 부적합인 경우 당해 기기가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본다.
  - 기술기준 부적합기기로 판명되어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이를 사전에 통지해야 하며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의견청취, 청문 등을 실시한다.
    - 제출기한 내에 당사자가 전화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경우 서식에 의한 구술 의견 기록서를 작성해야 한다.
    - 소장은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을 신의·성실로 청취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할 경우 행정처분 확정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소장은 지정취소 및 인증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토록 하고 조치결과에 대한 이행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소장은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부적합기기 조치결과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를 위하여 사용된 시료의 처리 방법
    - 사후관리 시료로 무상으로 반입된 기기는 사후관리 완료 후 즉시 반납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구매한 기기는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 및 관리전환·양여·매각·폐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7.3.2 효율적인 사후관리 실시 방안

사후관리 시료의 확보 및 시험 비율의 증대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사후관리 시료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고, 확보된 시료가

적기에 시험되어서 불량품 관리 등의 신속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시험은 외부 기관(예, 현재의 지정시험기관)에 유료로 위탁하도록 한다.

- 이를 위한 법제도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사후관리 시험 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전파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결정한다.

■ 현재의 시료확보율의 증대 방안

- 자기적합성선언을 한 기기의 제조자/수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시료 및 관련 서류의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한다.

■ 해당 시료 및 관련 서류의 보관기간을 정한다.

■ 행정 처분 기준의 세분화 및 구체화한다.

### 7.3.3 인증 및 사후관리 관련 법령 현황 및 개선방안

인증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 문제점과 그들의 개선 방안을 표7-7 에 제시하였다.

표 7-7 인증 및 사후관리의 현황 및 개선방안

현황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의 사후관리 관련 규정은 여러 개의 관련 법규 내에 산재하여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사후관리 절차 및 규정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VCCI는 “시장발체시험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독일은 FNA에 사후관리 담당부서를 두고 사후관리 절차 규정을 마련하여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의 사후관리 규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후관리 절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li> </ul>

표 7-7 (계속)

현황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에 수입되는 모든 정보통신 기기들은 그들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어떠한 절차 없이 통관된 후에 형식등록, 형식검정, 전자과적합등록을 받게 되어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기업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다. 선 통관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는 전무한 실정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용품의 경우 통관 시 세관장에게 안전인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조항을 수입 정보통신기기에 적용한다면 선 통관 후 인증제도로부터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제조자가 인증신청 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 또는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사후관리에서 인증표시 및 기술기준 부적합 시 국내 대리인에게 책임과 권한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내대리인(에이전트와는 다름)에게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고발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li> <li>• 따라서 외국 제조사가 인증시, 인증 당사자인 외국인증자에게는 사후관리의 행정조치 및 과태료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의 제조자, 수입자 그리고 판매자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대리인에 대한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li> <li>• 법규 위반 시 외국의 제조사 또는 인증 받은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li> </ul>

표 7-7 (계속)

현황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입제품이 인증시험 중 불합격되어 디버깅 한 경우 실제 양산 단계에 반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기의 부적합의 주요 원인이 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버깅 결과의 시험성적서 기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정비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 법규의 처벌 규정이 최근 정보통신기기의 제품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법규의 벌칙규정 중 고의로 위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벌금 대신에 과태료로 처벌함으로써 법을 위반한 경우에 보다 신속한 처벌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표7-2, 표7-3 참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사한 위반내용에 대한 양형기준이 전파법과 정보통신기본법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처벌 내용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 법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표7-2, 표7-3 참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후관리 관련 규정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임의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법 적용의 공정성을 잃을 수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일의 EMC 법의 위반 내용에 대한 처벌규정이 국내의 정보통신기기의 관련 법규의 처벌규정보다 더 세분되어 있기 때문에, 위반 사항에 대하여 독일의 EMC법을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한다.(표7-6 참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의로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과태료 등으로 비교적 가볍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일과 미국의 규정에서는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경우에 큰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표7-6 참고)</li> </ul>

#### 7.3.4 자기적합성선언에 대비한 사후관리 방안

향후 자기적합성선언에 대한 사후관리로의 전환이 예상됨에 따라서 관리의 목적과 대상 기기의 수 자체가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실정 및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 사후관리를 위한 시료확보의 확대
  - 사후관리 시료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대
  - 시료의 시험을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수거율이 증대
  - 일반인에 의한 신고(민원) 제도의 운용
- 사후관리 조직 및 인력의 확충
  - 기존 조직의 확대,
  - 소비자 보호 관련 단체/기관의 개입
- 지정시험기관의 역할 확대
  - 현행과 같이 신청인이 접수하는 기기를 검사, 확인
  - 유통 단계에 있는 물품에 대한 사후 관리차원에서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
- 제조자의 자기적합성선언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축소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분을 지정시험기관이 보완
  - 적합성평가 시에 지정시험기관의 과실이 있으면, 정부가 아닌 지정 시험기관이 책임을 부담

## 제 8 장 결론

- (1) 전기통신기본법과 전파법은 동일한 위반에 대하여 처벌내용이 서로 같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기통신기본법과 전파법은 서로 다른 처벌기준 갖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과 일관성 있는 법의 적용을 위하여 처벌 기준을 서로 일치 시킬 필요가 있다.
- (2) 향후 별도의 인증, 사후관리, 처벌규정과 MRA 규정을 포함하는 개별법(가칭 정보통신기기관리법)이 필요하다.
- (3) 최근 정보통신기기의 제품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벌금이나 징역과 같은 처벌 보다는 과태료로 처벌함으로써 법을 위반한 경우에 보다 신속한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4) 일본의 VCCI는 "시장발췌시험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독일은 FNA에 사후관리 담당부서를 두고 사후관리 절차 규정을 마련하여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의 사후관리 규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후관리 절차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5) 향후 별도의 인증, 사후관리, 처벌규정과 MRA 규정을 포함하는 개별법(가칭 정보통신기기관리법)이 필요하다.
- (6) 인증면제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기기에 인증면제 표지의 부착 의무 규정을 정보통신법시행령에 신설한다.(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에 안전인증면제기기에 대한 안전인증면제표지를 규정하고 있음)
- (7) 전기용품의 경우 통관 시 세관장에게 안전인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조항을 수입 정보통신기기에 적용한다면 선 통관 후 인증제도로부터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 (8) 외국의 제조자는 법령에 따라 인증 신청 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 또는 위임할 수 있다(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제5조 6항). 그러나

이들이 인증 및 사후관리 관련 법규를 위반 했을 때 외국 인증자 또는 국내 대리인에게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내의 인증 받은 자에 적용하는데 있어서와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 된다. 따라서 국내 대리인에 대한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의 제조자나 인증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규의 마련이 요구된다.

- (9) 독일과 미국의 규정에서는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경우에 큰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 (10) 위반 내용에 대한 처벌규정이 매우 세분화 되어 있는 독일의 EMC 법을 참고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정보통신기기 관련 법규의 처벌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 (11)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처리절차 등을 정하는 지침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 (12) 향후 도입하게 될 자기적합성선언의 인증방식에 따른 사후관리가 관리의 목적과 대상 기기의 수 자체가 양적 그리고 질적인 면에 있어서 현행의 사후관리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 실정 및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대비하여야 한다.



## 참고 문헌

- [1] “정보통신기기의 인증제도 및 MRA연구(I)”, 정보통신부, 2004.1
- [2] “정보통신기기의 인증제도 • 상호인증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관련 국제협력(MRA) 연구(I)”, 정보통신부, 2002.1
- [3] “국가별 통신기기 인증제도”,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 2003.3
- [4] 최승호, “정보통신기기 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하 선진외국의 법 · 제도 조사연구”, 한국정보통신 연구원, 2003.12
- [5] <http://www.rrl.go.kr>
- [6] <http://www.regtp.de>
- [7] “정보통신 인증 체계 연구“, 정보통신부, 2001.1
- [8] S. Winkelmann, "Market Surveillance in Germany," VCCI Forum, 2004.3.5
- [9] "정보통신기기 검 · 인증제도 사후관리 개선방안 연구,"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2001. 9
- [10] MRA에 대비한 정보통신기기 사후관리 개선방안 연구, 전파연구소, 2004.12
- [11] 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 및 MRA 연구, 정보통신부, 2004.12
- [12] "EMC Directive(89/336/EEC),"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No L 139/19, 1989.
- [13] "R&TTE Directive(99/5/EC),"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No L 91/10, 1999.
- [14] "GUIDE TO THE IMPLEMENTATION OF DIRECTIVES BASED ON NEW APPROACH AND GLOBAL APPROACH", EC 1998.